

| SRI-정책-2024-02 |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dicators in Suwon City

이영안

CONTENTS

연구요약

01 서론 0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02 인권지표의 개념 및 현황 05

제1절 인권의 개념 및 기능

제2절 국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제3절 국내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제4절 소결

03 수원시 인권 및 지표 현황 49

제1절 수원시 인권행정 현황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2절 수원시 통계 및 선행지표 현황

제3절 소결

04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67

제1절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절차 및 방향

제2절 수원시 인권지표의 선정

제3절 IPA 분석 및 국가인권지표와 비교 분석

제4절 소결

05 결론 및 정책제언 117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123

부록 127

연구요약

연구목적

-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코로나 팬데믹, 환경 위기,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돌봄 위기 등 복합적인 현대의 사회 위험에 따라 발생하는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행정의 역할이 중요해짐
 - 2013년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수원시가 추진한 인권행정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인권정책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해야 하는 시점임
-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을 토대로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주요 내용 및 결과

- 수원시 인권지표는 다섯 가지의 절차를 통해 개발
 - 첫째, 국내·외 인권지표 사례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권지표 초안 작성
 -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을 토대로 기존 인권지표들을 분류하여 인권지표 초안 98개 추출
 - 둘째,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인권지표별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신규 인권지표 83개 추출
 - 셋째, 인권담당관과 협력하여 담당(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 83개의 신규 인권지표에 수원시 관련 지표 포함 총 136개의 인권지표를 구성하여 인권지표별 담당(관련)부서에게 인권지표명, 측정방법, 출처, 측정가능여부 등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총 80개 항목을 수원시 인권지표로 확정
 - 넷째,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대상 IPA 분석 실시

- 확정된 수원시 인권지표에 대한 중요성과 적실성 조사
- 향후 '수원형 인권지표' 개발 시 중요성과 적실성이 높은 지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원을 투자하며, 중요성과 적실성이 낮은 지표는 재검토 필요
-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권지표의 활용방안과 관리방안 검토
 - 수원시 인권지표는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초점을 맞춘 현재 지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수원 시민의 기본권에 주목해 인권의 보편주의 원칙 준수 필요
 - 행정 내·외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인권지표를 보완 및 수정하여, 실제 인권지표를 수원시의 인권정도를 매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

정책제언

□ 인권정책 실행과정 점검

- 수원시 인권지표는 인권정책의 실행과정 전반(① 계획수립 단계, ② 정책추진 단계, ③ 사후평가 단계)에서 모두 활용
- 인권정책을 실행하는 주무기관은 각 과정에서 인권지표를 활용해 심의기능 강화

□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 수원시 인권지표는 단순히 자체적으로 인권정책을 점검하거나 내부 심의하는 용도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가 수원시의 인권상황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및 비판하는 데 활용
- 개정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신설된 '시민 인권지기'를 임명해, 이들이 수원시 인권지표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지침으로 구성

□ 수원시민의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고,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원시 인권교육의 운영계획이 수립됨
- 수원시 인권지표는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

□ 인권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본 연구를 발전시켜 이후 '수원형 인권지표' 개발 시 '수원서베이'나 '수원도시정책지표'를 활용하여 수원시 인권지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인프라로 구축

주제어: 인권지표, 인권정책 기본계획, 통계, 선행지표

0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¹⁾

1 연구배경

현대 사회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환경 위기,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돌봄 위기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문제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복합적인 사회문제들은 인권 문제, 그리고 인권행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권행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실행할 때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손영숙 외, 2023). 위험요소들은 권력 및 위계질서와 교차하여 끊임없이 약자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인권행정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024년은 수원시가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지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10년 동안 인권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영안 외, 2024). 그러나 현재 수원시는 전반적인 인권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태이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사가 공직자, 체육계, 사회복지시설 등 한정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수원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인권지표는 중요하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현황과 근거를 토대로 시민사회와 행정내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권지표의 연구 및 개발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²⁾에 기반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인권지표는 이러한

1) 본 연구는 수원시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주제를 의뢰받아 시행한 정책연구임

2)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인권지표의 개발)는 다음과 같다.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10년 동안 시행한 인권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행정 내·외부와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시민 인권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권지표 개발은 2024년 수원시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다.

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원시 인권지표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② 시민 맞춤형 인권 보장, ③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④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해당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은 각 정책목표에 맞추어 9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원시 인권지표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 연구범위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기초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전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 통계,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국내·외 인권지표 현황 및 수원시 인권행정 현황을 정리한다. 둘째, 설문조사, IPA 분석을 통해 수원시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전문가, 공무원 및 실무자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수원시 인권지표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2 •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문헌연구와 통계 및 행정자료 분석을 시행한다.

먼저 인권 및 인권지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행정자료를 살펴본다. 또한 인권지표 관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행정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인권지표가 지표로서 적합한지 그 여부를 조사하고, 인권지표의 경중에 따라 지표의 위치를 조정한다.

셋째,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진행한다. 수원시는 인권지표를 매년 분석·평가해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지표들 간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확인하여 인권지표 중 개선하고 발전해야 할 인권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으로 수원시 인권지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와 IP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전문가, 공무원 및 실무자 대상의 자문회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인권지표의 기초자료로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02

인권지표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인권지표의 개념 및 기능

1 · 인권의 개념

인권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작(Karel Vasak)에 따르면 1세대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권, 2세대 인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생산 및 자원 분배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권, 3세대 인권은 여성·아동·장애인 등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에 주목하고 이들의 연대의 권리를 존중하는 집단권을 의미한다(손병덕 외, 2021).

이처럼 인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졌으며 내부에 포함되는 목록이 점점 확장되어 왔다. 오늘날의 인권은 이를 정의하는 법이나 선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 인권의 개념

구분	인권의 개념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특징 또한 다양한데 크게 ① 보편성, ② 도덕성, ③ 근본성, ④ 추상성, ⑤ 우월성 다섯 가지로 그 특성을 나눌 수 있다. 먼저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생득적인 권리로 누구나 이를 언제 어디서나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별 특수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두 번째로 인권은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도덕적 권리라는 점에서 ‘도덕적’이다. 세 번째로 인권은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근본적’이며, 다른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본 척도에 해당한다. 네 번째로 인권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추상성’을 띤다. 그렇기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모든 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우월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정원호 외, 2016).

2 • 인권지표의 개념 및 기능

인권은 추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지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인권지표는 추상적인 인권 개념을 평가하고 인권의 실태와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한다. 또한 인권지표는 수치나 통계로 인권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인권발전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지표는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단순 통계자료와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인권지표는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먼저 인권지표는 인권항목을 수치화, 단순화하여 인권의 변화 및 흐름의 파악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인권지표는 인권 개념을 구체화하여 인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며, 인권기본계획이나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김재철 외, 2011; 김근혜·강성권, 2014; 이동영, 2020).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지표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지역을 인권도시로 구축하는데 있어 초석이 된다. 이는 인권지표가 인권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본 자료로 이용되면서 지역사회의 인권 수준을 고양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권정책 및 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인권 보장을 위한 흐름은 지속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인권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김근혜·강성권, 2014; 이혜진 외, 2021).

제2절 국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1948년 12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을 목적으로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초기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였다면, 1980년대 부터는 휴매너(1985)의 ‘세계인권가이드’, 하스(1994)의 ‘인권지표’, 굽타(1994)의 ‘인권지수’ 등 국가별 인권상황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지표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도시)의 인권지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실효성 있는 인권지표 수립을 위해 인권의 개념, 인권지표 선정 시 주의 사항, 인권지표 수집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2012년 발간하였다.

최근 인권지표에 대한 논의는 2015년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비, 국제 평화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추진해 나갈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SDGs의 17개 목표 모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16번 목표 “평화와 정의 제도: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측정지표와 내용은 인권지표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높은 국외 인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번 제2절에서는 국외 인권지표 사례로 OHCHR의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의 내용 및 EU의 인권지표를 검토한 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들이 인권지표와 연관되어 관리되는지 파악한다. 그 이유는 유엔 인권지표는 국제기구에서 2010년대에 발표된 상대적으로 최신 인권지표에 해당하며, EU의 인권지표는 국가별 구체적인 인권지표 수립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3) OHCHR 홈페이지, “SDG indicators under OHCHR’s custodianship”, 검색일: 2024.03.27.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and-mechanisms/human-rights-indicators/sdg-indicators-under-ohchrs-custodianship>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12)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

1) 인권지표의 범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12)는 인권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지표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 국가의 인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지표도 인권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권이 포함하고 있는 자유, 평등의 가치가 단순하게 통계적 수치로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에서도 '인권지표'는 단순 통계적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표임을 명시하고 있다(〈표 2-2〉 참조).

정량/정성지표와 함께 인권지표는 객관적(사실 기반) 지표와 주관적(판단 기반) 지표가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12). 아동의 비만율, 폭력 사망자 수와 같이 직접 관찰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사실 또는 사건은 객관적(사실 기반) 지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신체적 자유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평가, 인권 관련 의견 등은 주관적(판단 기반) 지표로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는 인권지표를 단순히 정량지표로 구성하기보다 정량적, 정성적, 객관적, 주관적 등 모든 유형의 지표를 식별하고 설계할 수 있는 복합적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OHCHR, 2012).

표 2-2 |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에서 인권지표의 범주

구분	객관적(사실기반)	주관적(판단기반)
정량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직접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사물,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량적 형태로 표현된 지표를 의미함 예: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적 형태로 표현되지만, 인식, 의견, 평가 같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정보를 기반으로 수집된 지표를 의미함 예: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정성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직접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대상,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범주형 형식으로 서술된 지표를 의미함 예: 특정 국가의 인권 조약 가입 여부: 가입함 /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각, 의견, 평가 또는 판단인 정보를 바탕으로 반드시 범주형 형식이 아닌 서술적으로 표현된 지표를 의미함 예: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자료: OHCHR(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을 토대로 재구성

2) 인권지표의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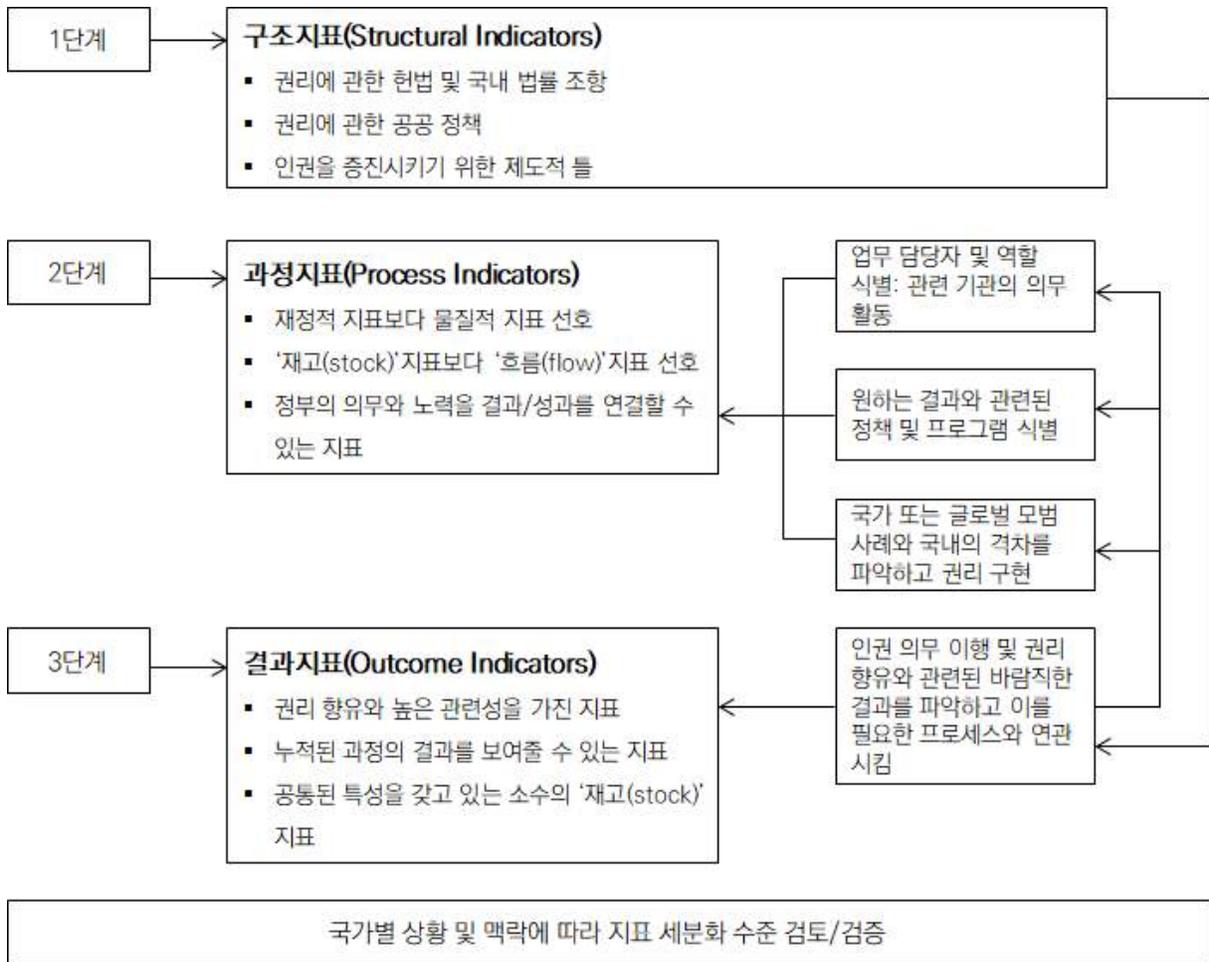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12)는 한 국가의 인권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약속(commitments)-

노력(efforts)-결과(results)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지표도 구조지표(structural indicators),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s)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OHCHR, 2012).

구조지표는 3단계 중 약속에 해당하는 지표로 한 국가가 국제적 인권 서약에 참여하거나, 인권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 과정지표는 3단계 중 노력에 대응하는 지표로 인권 수준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인력 양성 등의 지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지표는 3단계 중 결과에 대응하는 지표로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성취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기대 수명, 자살률, 사망률 등이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12)는 이러한 단계를 고려하여 다음 <그림 2-1>과 같은 지표 선정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2-1 |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에서 지표의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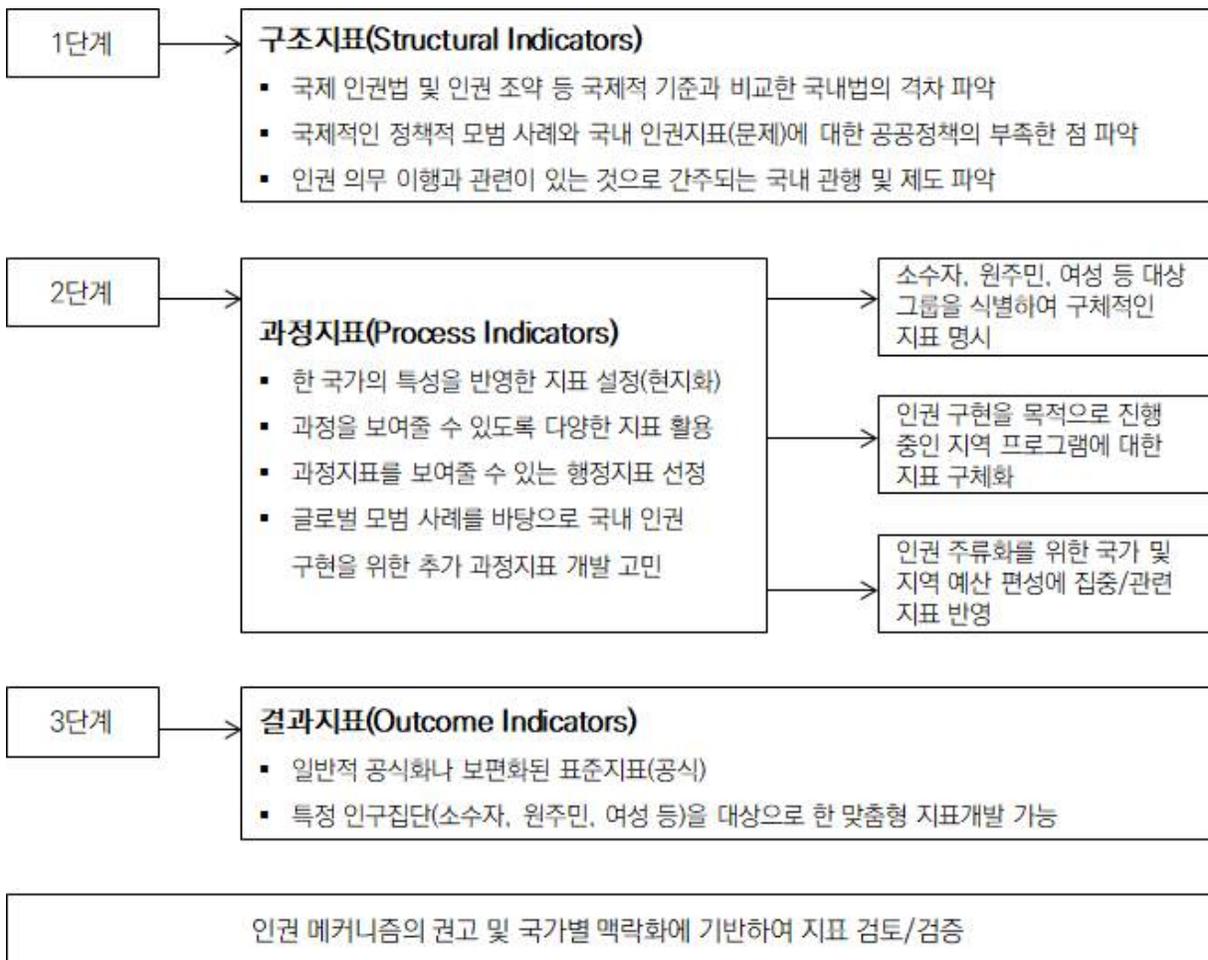
자료: OHCHR(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을 토대로 재구성

3) 인권지표의 맥락화(Contextualizin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12)는 인권지표를 통해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춰 맥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권지표를 맥락화하는 과정 또한 인권지표 선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약속-노력-결과 각 단계에 따라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를 맥락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권지표의 맥락화 관련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 2-2>와 같으며, 인권지표 선정 예시는 다음 <표 2-3>과 같다.

그림 2-2 |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에서 인권지표의 맥락화 과정



자료: OHCHR(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을 토대로 재구성

표 2-3 | 「유엔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반영한 인권지표 선정 예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

구분	범외 혐의에 따른 체포 및 구금	자유에 대한 박탈(행정적)	법원의 판결	법 집행 공무원의
구조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비준한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 • 헌법 또는 다른 형태의 상위법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의 발효일 및 적용 범위 • 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의 발효일 및 적용 범위 • 법원의 형사 기소, 신고 또는 결정 또는 행정적 근거(예: 이민, 정신 장애, 교육 목적, 부랑)에 근거한 자의적인 자유 박탈에 대한 정 • 국가기관 국제조정위원회의 절차 규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의 인증 유형 			
과정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 또는 구금된 건수 /비율(재판 전 및 재판 계류 중) • 보고 기간 중 보석금 또는 혐의 미제기로 인해 전심 및 공판 구금에서 석방된 피고인의 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기간 동안 국가 행정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건수/비율 • 보고 기간 동안 행정 구금에서 석방된 건수/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체포 사유를 통보받기 전, 혐의 통지를 받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의 비율 • 보고 기간 동안 법원에 제기된 인신 보호 청원 및 유사 청원 건수 • 보고 기간 동안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 •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 중 변호사 또는 법률 지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 • 상급 법원 또는 항소 기관의 검토 대상이 되는 사건의 비율 • 보고 기간에 전심 및 재판 구금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사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의적 체포 및 구금(형사 및 비신체적 학대 또는 범 • 보고 기간 중 법 집행 공 • 이어진 비율 • 정부가 제공한 신분증을 소 • 보고 기간 동안 인구 10 • 체포, 판결, 유죄 판결을 • 보고 기간 중 직무 수행 • 인구 10만 명당 총기 소유 • 신고 기간 중 경찰에 신
결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기간 종료 시점의 법원 명령 또는 행정 당국의 조치에 근거한 인구 10만 명당 구금 건수 • 재판 후 구금을 포함한 자의적 구금 보고 사례 • 국가 법원에서 불법으로 선언한 체포 및 구금 비율 • 사법 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된 체포 또는 구금 후 석방 및 보상받은 피해자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집에 혼자 있을 때) • 보고 기간 동안 근무 중인 학대 또는 범죄의 발생률

자료: OHCHR(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을 토대로 재구성

2 • EU 인권지표

유럽연합 조약 제21조는 유럽연합의 발전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으로 민주주의, 법치,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인간 존엄성 존중, 평등과 연대의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유럽 각 국가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2020~2024년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유럽연합 행동계획」은 ① 인권에 대한 EU의 리더십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을 간소화, ② 정부, 기업 및 사회적 파트너와의 파트너십 강화, ③ 책임의 격차와 법치주의의 침식 문제 해결, ④ 새로운 기술이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파악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은 다음의 표와 같은 인권지표의 7대 세부 목표와 20대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EU 7대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적인 모든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채택된 국가 법률 체계 및 정책의 연계성 강화, ▲ 성별 대응성, 포용성, 접근성, 도달 범위, 서비스 품질, 환경 보호, 평등 대우 보장, 인간 존엄성 등 필수적인 모든 인권을 옹호하는 공공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개선, ▲ 공적 및 사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평등, 포용, 존중 및 참여 개선, ▲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 효과성 향상, ▲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자간 및 지역적 수단, 메커니즘 및 파트너십을 포함한 글로벌 인권 시스템의 효과성 향상, ▲ 인권 존중, 보호 및 증진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도 향상, ▲ 신기술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수단 마련이다.

각 EU 7대 세부 목표별 인권지표의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 EU 7대 세부 목표별 인권지표

A.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적인 모든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채택된 국가 법률 체계 및 정책의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과 비차별을 촉진, 집행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국내법, 국가 행동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다음을 보장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준된 국제 인권 조약에 따라 국가가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법률 또는 정책의 수, 문서 범주별로 세분화
B. 성별 대응성, 포용성, 접근성, 도달 범위, 서비스 품질, 환경 보호, 평등 대우 보장, 인간 존엄성 등 필수적인 모든 인권을 옹호하는 공공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정부 총지출의 비율 • 파트너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개혁 및 공동 합의 이행에 지원하는 EU 자금 지원 이니셔티브 수 •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젠더 기반 및 성폭력 사건 중 수사 및 형이 선고된 사건의 비율 • 여성, 남성, 소녀, 소년 등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의 사례 중 경찰에

- 기본적인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알고 있는 인구의 비율
-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재 피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사회보호층/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인구의 비율
- 토지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가진 전체 성인 인구 중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성별 및 소유권 유형별 비율
- 신고된 건수
- 관련 공공 기관에 의해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인권침해 사건 중 피해자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의뢰된 사건의 비율
- 관련 공공 기관에 접수된 인권 침해 관련 인권 진정 건수
- 소외된 집단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수

C. 공적 및 사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평등, 포용, 존중 및 참여 개선

- 지난 12개월 동안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에 근거하여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
- 공공 부문의 고위직에 지명된 여성의 비율
- 민간 부문에서 고위직에 지명된 여성의 비율
- 관리직 여성 비율
- 모든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수
-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할당량을 추적하고 할당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여성, 비즈니스 및 법률 지표 점수
- 입법부, 공공 서비스,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및 지방 기관의 성별, 연령, 장애인, 인구 집단별 국가 분포와 비교한 직책 비율
- 입법부, 공공 서비스,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및 지방 기관의 성별, 연령, 장애인, 인구 집단별 비율
- 15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18세 이전에 결혼한 20~24세 여성의 비율
- 여성 생식기 절단/절단을 경험한 15~49세 소녀와 여성의 연령별 비율
- EU의 지원으로 아동 노동에서 벗어난 5~17세 아동의 수, 성별 구분
- EU 지원 이후 강제 노동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 수

D.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 효과성 향상

-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관의 존재
- EU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개발 또는 개정된 정부 정책의 수
- 시민 공간의 질과 관련한 CIVICUS 모니터에 따른 국가별 점수
- 국가 인권 대화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수
- 주정부 및 주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HRD의 범위
- 국가 당국이 위협에 처한 HRD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정도

E.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자간 및 지역적 수단, 메커니즘 및 파트너십을 포함한 글로벌 인권 시스템의 효과성 향상

- 주제별 주제에 따라 세분화된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사항 이행 건수
- 양성평등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국내·외 관계자들의 공동 성명 및 약속 건수
- 국가인권기구(NHRI)의 지역 그룹과 국가인권기구 글로벌 연합(GANHRI)에 참여하는 국가인권기구(NHRI) 수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문제에 접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제(유엔) 및 지역 메커니즘 차원의 회의 횟수, 회의에서 다루는 주제별 세분성
- 인권 모니터링 기관 및 지역 법원에서 연간 처리한 개별 불만 건수
- 연간 지역 및 국제 인권기구에 제출된 시민사회단체(CSO) 보고서 수

F. 인권 존중, 보호 및 증진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도 향상

- EU의 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관행을 적용하는 중소기업(MSME)의 수
- 인권 성과를 기준으로 선별된 민간 부문 공급업체의 비율
- 인권 성과를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심사하는 공공 기관의 비율
- 기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 기관이 차별 금지와 모든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품질에 관한 국제 및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정도
- 기업 인권 벤치마크(OPSYS 핵심 지표)에 따라 민간 부문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실제 및 잠재적인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평가, 완화 및 소통하는 정도

G. 신기술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수단 마련

- 프리덤 하우스 지수의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점수
- 디지털 환경 및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고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정도

자료: 유럽연합 홈페이지, “Human Rights”, 검색일: 2024.03.27. https://capacity4dev.europa.eu/resources/results-indicators/human-rights_en

EU 20대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형태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사형을 근절하기 위한 역량 강화, ▲ 인권 옹호자, 가족 및 법적 대리인을 위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자주성 강화, ▲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기 위한 인식 및 옹호 역량 강화, ▲ 인권 이행 및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유해한 사회적 규범 및 관행의 제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 성 및 생식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 모든 아동의 권리 증진,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 프로그램에서 권리 기반 접근법의 통합 및 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 기후 변화, 깨끗한 환경, 토지, 천연자원, 식량, 물, 위생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규제 역량 및 조치 강화, ▲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역량 및 홍보 강화, ▲ 시민사회단체, 여성, 청소년, 아동, 소수자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역량 강화, ▲ 장애인의 모든 서비스 및 생활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 조치 강화, ▲ 시민 공간 폐쇄를 방지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 및 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혐오 발언, 극단주의 및 허위 정보 퇴치, ▲ 문화적 권리, 문화유산 및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식 및 옹호 역량 강화, ▲ 사회 서비스,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다루는 규제 역량 및 조치 강화, ▲ 노동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 국가 행위자, 국제 및 지역 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인권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기회 강화, ▲ 인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 및 인공 지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평가 및 구현하기 위한 국가 행위자의 역량 강화, ▲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에 제한 없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이다.

EU 20대 세부 과제별 인권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 EU 20대 세부 과제별 인권지표

1. 모든 형태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사형을 근절하기 위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가 지원하는 법률 지원 개입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수 • 안보, 국경 관리,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분쟁 예방, 민간인 및 인권보호를 위해 지원한 국가 기관 및 비국가 행위자 수 •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피해자를 위해 설립되거나 지원된 재활 센터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근절을 위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도달한 사람 수, 가능한 경우 성별 및 행위자 유형별로 세분화됨 • 모든 형태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근절에 대한 지식 및/또는 기술을 향상시킨 EU 자금 지원 개입으로 훈련받은 사람 수 •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개입을 통해 사형 근절에 대한

- 모든 형태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근절을 위한 공개 또는 표적 인식 캠페인을 통해 도달한 사람 수
- 지식 및/또는 기술을 향상시킨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수, 행위자 유형 및 개발된 기술별로 세분화하여 집계한 수

2. 인권 옹호자, 가족 및 법적 대리인을 위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자주성 강화

- EU 지원의 혜택을 받거나 EU의 지원을 받는 풀뿌리 시민 사회 단체의 수
- 국가 당국이 위협에 처한 HRD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정도
- 네트워킹, 옹호, 보안 교육을 위한 역량 개발에서 EU의 개입으로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지 않은 인권 옹호자 시민 사회 단체의 수
- 네트워킹, 옹호, 보안 교육을 위한 역량 개발에서 EU의 개입으로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지 않은 인권 옹호자(개인) 수
- 주정부 및 주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HRD의 범위
-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인권 침해 피해자 수

3.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기 위한 인식 및 옹호 역량 강화

- 전통적, 종교적, 지역사회 지도자를 포함한 지역 및 국가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과 차별적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정도
- 성별 및 부문별(공공, 시민사회 또는 민간 부문)로 구분하여 비차별적 수사 사용 교육을 받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개인)의 수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EU 지원 개입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개인 수
- EU가 지원하는 법률 구조 개입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 수
-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의 모든 다양성에 대한 인권 침해 신고 교육을 받은 미디어 담당자 수
- 모든 다양성에 대해 사회적 규범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도하도록 훈련받은 미디어 담당자 수

4. 인권 이행 및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EU의 지원을 받아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 당국이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의 수
-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국가 기관의 수
-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맥락에서 인권 원칙과 현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식 및/또는 기술을 향상시킨 EU의 자금 지원 개입으로 훈련받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개인)의 수
- EU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개발 또는 개정된 정부 정책의 수
- 인권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구 개발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기관 수
- 민주적 공간, 인적자원개발 및 취약 집단 위협에 대한 연구 및 문서화에 대한 지식 및/또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EU의 자금 지원 개입으로 훈련받은 국가인권기구(NHRI) 대표의 수

5.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유해한 사회적 규범 및 관행의 제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
- 아동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이니셔티브에서 EU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
- 유해한 전통 관습 및 여성 할례에 대한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에서 EU의 지원을 받아 도달한 사람 수
-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훈련받은 의료진 수

6. 성 및 생식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 EU의 지원으로 개발된 공교육 커리큘럼용 성교육 자료의 수, 대상 연령대 및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될 수
- EU의 지원을 받아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수
- 성관계 및 생식 건강 관리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에 대해 EU의 지원을 받은 15~49세 인구의 수
- EU의 지원을 받아 국내 및 국제 표준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MNH) 전문가 수

7. 모든 아동의 권리 증진,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 및/또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개입을 통해 훈련받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개인)의 수
- EU 지원을 통해 교육 또는 훈련에 (재)통합된 아동 노동 관련 아동의 수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메커니즘의 수
- 주제별로 분류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포함된 EU 지원으로 개발된 권고안/정책 초안 수
- EU 지원을 받아 교육에 등록된 학생 수
- 아동의 연령과 역량에 따라 협의 과정에 아동을 직접 참여 시키기 위해 EU의 지원으로 개발된 권고안/정책 초안 수
-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정보에 대해 EU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간행물/인식 제고 자료가 장애인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고, 보장되는 권리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된 청소년 및 아동의 수

8. 프로그램에서 권리 기반 접근법의 통합 및 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 전략 및 프로그램에 권리 기반 접근법을 통합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수
- 전략 및 프로그램에 권리 기반 접근법을 통합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기관/조직/그룹) 수
- 민간 부문에서 정책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에 권리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EU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전략의 수

9. 기후 변화, 깨끗한 환경, 토지, 천연자원, 식량, 물, 위생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규제 역량 및 조치 강화

- 기후변화 및/또는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보유한 국가 및 도시 수
- 환경 문제 정보에 대한 권리, 참여 및 구제에 대한 지식/기술이 향상되고 EU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
- EU의 지원을 받아 개선된 식수원 또는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수
- 사람들의 토지 접근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조치 개발에 대한 지식/기술 향상과 함께 EU 지원을 통해 훈련받은 국가 기관의 수

10.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역량 및 홍보 강화

- 법적 신원 등록제도 개발을 위해 EU의 지원을 받는 국가 기관 수
- 민사 기관에 출생 등록을 한 5세 미만 아동의 연령별 비율

11. 시민사회단체, 여성, 청소년, 아동, 소수자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역량 강화

-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 회의 및 유엔 회의에 참여하도록 지원받은 CSO의 수
- EU의 지원으로 개발된 정책 과정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 시키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수
- 성별, 연령, 장애 상태 및 인구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EU의 지원으로 기술 및/또는 지식이 강화된 사람들의 수
- 성별, 연령, 인구 집단 및 장애 상태별로 세분화된 EU 지원으로 교육을 받은 관리자 직책 기술 향상 인원 수
- EU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개발 또는 개정된 정부 정책의 수
- 성별, 연령, 인종 및 종교적 배경, 장애 상태별로 구분하여 지역, 국가, 지역 및 국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EU의 지원을 받은 사람 수

12. 장애인의 모든 서비스 및 생활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 조치 강화

- 포용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사용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미디어의 수
- 보조 기술을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수
- 장애인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및/또는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기관 수

13. 시민 공간 폐쇄를 방지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 시민 공간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시민 사회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 수, 성별 구분
-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플랫폼의 수와 EU의 지원 수

14.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 및 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혐오 발언, 극단주의 및 허위 정보 퇴치

- 기본적 자유에 대한 불법적 제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옹호 전략과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통해 도달한 사람 수
- EU의 지원으로 혐오 발언, 극단주의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 사람들의 수
- EU의 지원으로 수행된 국가 및 지역 미디어 환경 평가 건수
- 정보 접근성,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극단주의, 미디어 사용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시민 사회 캠페인/이벤트를 통해 EU의 개입을 지원하여 교육 기간 동안 성별, 연령 및 주제 별로 세분화하여 도달한 사람들의 수
- EU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플랫폼에서 혐오, 폭력, 테러를 선동하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삭제한 건수

15. 문화적 권리, 문화유산 및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식 및 옹호 역량 강화

- 소수 민족, 원주민,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전통 지식, 언어 및/또는 관습의 전승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단체 수
- 사람들의 문화적 권리, 문화유산 및 다양성을 문서화하거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EU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인식 제고 및/또는 옹호 자료를 통해 도달한 사람들의 수
- 문화적 권리, 문화에 대한 접근성, 문화유산 및/또는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현대적 방법의 사용에 대한 지식/기술의 증가와 함께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개입으로 훈련받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사람) 수

16. 사회 서비스,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다루는 규제 역량 및 조치 강화

- 사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EU 지원의 혜택을 받은 국가 수
-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설계/개정을 위해 EU의 자금 지원 개입이 지원한 정도
- 양질의 저렴한 교육 제공을 위한 시스템 설계/개정에 EU의 재정적 개입이 기여한 정도
- 사회 서비스, 보건 서비스 및 교육 제공을 위한 현대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을 향상시킨 EU 자금 지원 개입으로 훈련받은 공무원 수, 행위자 유형별로 세분화 된 공무원 수

17. 노동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 EU가 지원하는 기관 또는 직장 기반 직업훈련/기술 개발 개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수
-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옹호 전략 및 캠페인을 통해 도달한 사람 수
-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EU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
- EU의 지원을 받는 강제 노동 상황에 처한 사람 수
-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개입을 통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UNGPs)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식을 높인 사람들의 수

18. 국가 행위자, 국제 및 지역 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인권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기회 강화

- 인권,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파트너와의 공동 활동 및 프로그램 수
- 인권 교육을 장려하는 EU의 지원을 받는 대학 수
- 다른 국가, 지역 또는 국제 인권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인권 기관의 수
- 정부 간 메커니즘과 국가인권기구(NHRI) 간에 EU의 지원으로 개최된 워크숍 및 회의 수
- 강의, 인턴십 주최, 현장 방문, 공동 연구와 같은 인권 교육 행사에서 대학과 협력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비대학 기관의 수

19. 인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 및 인공 지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평가 및 구현하기 위한 국가 행위자의 역량 강화

- 정책/전략/법/규정의 개발 및/또는 개정, 시행을 위해 EU의 지원을 받는 국가 수
-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a) 국가 수 b)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인구 수
- 파트너국 정부 당국과의 신기술 규제 및 사용에 대한 포괄적 대화 및 협의 건수, EU 기금 지원 조치에 의해 촉진 및 촉진된 건수

20.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에 제한 없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EU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 수
- 온라인 활동 및 정책의 인권 및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감지하고 감독하기 위해 EU의 자금 지원을 받는 NGO의 수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EU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디지털 도구의 수, 행위자 유형별로 세분화된 수

자료: 유럽연합 홈페이지, "Human Rights", 검색일: 2024.03.27. https://capacity4dev.europa.eu/resources/results-indicators/human-rights_en

3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지표

2015년 UN에서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비, 국제 평화 등을 위해 17개 분야의 세부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빈곤을 퇴치하고, 복지를 확대하며, 평화와 정의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는 인권지표와 깊은 친화성을 갖고 있어 최근에는 인권지표에 대한 논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인권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개발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2030 UN SDGs」에 인권이 중요한 부분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빈곤율,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인권 관련 지표들이 UN SDGs에 반영되어 있으며, 다양한 UN SDGs 지표 중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관리하고 있는 지표는 <표 2-6>과 같다.

표 2-6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영역	인권지표
불평등 완화	•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 철폐를 위한 노력
평화, 정의와 제도	• 분쟁 관련 사망 • 인권 운동가, 언론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살해 및 기타 공격 • 독립 국가인권기구

자료: OHCHR 홈페이지, "SDG indicators under OHCHR's custodianship", 검색일: 2024.03.27.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and-mechanisms/human-rights-indicators/sdg-indicators-under-ohchrs-custodianship>

2) EU의 인권지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EU도 인권지표의 전체 목표 및 비전을 설정한 체계도에 SDGs와의 관련성을 명시하고 있다. EU는 다양한 SDGs 목표 중 16번 목표(평화, 정의와 제도)를 인권지표와 가장 관련성 깊은 지표로 명시하고 있다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총 17개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No Poverty), ▲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농업강화(Zero Hunger), ▲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Quality Education), ▲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Gender Equality), ▲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Clean Water and Sanitation), ▲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Affordable and Clean Energy), ▲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회복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Reduced Inequalities), ▲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기후변화와 대응(Climate Action),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Life Below Water), ▲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 토지 파괴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Life on Land),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Partnerships for the Goals)이다.

아래의 <표 2-7>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영역 총 17개 중 주요 영역 5개와 이와 연관된 인권지표를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4) EU는 인권지표 전체 목표, 세부 목표, 과제를 명시한 체계도에서 관련 SDGs에 관해 “SDG 16: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합니다,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 성을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기관을 구축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EU 홈페이지).

표 2-7 | EU의 인권지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영역	인권지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SDGs 1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재 피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사회보호층/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인구의 비율 • 필수 서비스(교육, 보건 및 사회 보호)에 대한 정부 총지출의 비율 •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토지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가진 전체 성인 인구 중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고 있고 (b)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성별 및 소유권 유형별 비율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SDGs 3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SDGs 5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직 여성 비율 •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할당량을 추적하고 할당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15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18세 이전에 결혼한 20~24세 여성의 비율 • 여성 생식기 절단/절단을 경험한 15~49세 소녀와 여성의 연령별 비율 • 평등과 비차별을 촉진, 집행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SDGs 8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아동의 비율과 수, 성별 및 연령별 세분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s 16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관의 존재 • 지난 12개월 동안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에 근거하여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 • (a) 입법부, (b) 공공 서비스, (c)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및 지방 기관의 성별, 연령, 장애인, 인구 집단별 국가 분포와 비교한 직책 비율 • (a) 입법부, (b) 공공 서비스, (c)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및 지방 기관의 성별, 연령, 장애인, 인구 집단별 국가 분포와 비교한 직책 비율 • (a) 입법부, (b) 공공서비스, (c)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및 지방 기관의 성별, 연령, 장애인, 인구 집단별 비율 • 민사 기관에 출생 등록을 한 5세 미만 아동의 연령별 비율

자료: 이우균 외(202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가지표의 한국 적용 및 공간분석 -SDGs 2·6·7·12·13·15를 중심으로 -」; 유럽연합 홈페이지, "Human Rights", 검색일: 2024.03.27. <https://capacity4dev.europa.eu/resources/results-indicators/human-rig>

제3절 국내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한국의 인권지표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뤄졌다. 다양한 인권지표 관련 연구들 중 본 연구에서는 중앙(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지표, 지방정부의 인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 국가 인권지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형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가위원회의 2011년 연구는 한국의 객관적인 인권 수준을 파악하고,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인권지표를 구성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국가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로 인권지표로 구성했으며, 주관적 지표는 내부자 평가와 외부 방문자 평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구정우 외, 2011).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 인권지표 세부 내용은 <표 2-8>, <표 2-9>, <표 2-10>과 같다.

표 2-8 |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인권지표: 객관적 인권지표(국가 기관별)

국가기관	지표
기획재정부	소득분배 개선,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인권 직접 기관에 인권 관련 예산 배분, 해외 인권, 개발 원조 제공, 적절한 생활기준 확보
지식경제부	중앙-지방간 경제 격차 완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양,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국민기초 생활보장, 해외 인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부분 안정화, 농어업인 생존권 보장, 식량권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예능·예술인인권보호, 일반시민 문화권 보장, 소외계층 문화 복지 확대, 저작권 보호
국토해양부	지역균형발전 촉진, 주거권 보장(취약계층 포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인권 보장, 학습권 보장,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대, 건강권 보장, 보육정책 개선, 소수자 복지 확대
고용노동부	일할 권리 보장, 취약계층 고용평등 달성, 근로기준의 인권친화성, 노사관계의 인권친화성, 산업재해 방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촉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완화, 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권 보장, 경찰 및 전의경 인권 보장, 시민적 자유 보장, 복지 공무원 확대, 개인정보보호 및 격차해소, 정보권 보장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생존권 보장, 북한 인권보호, 국제 인권보호, UN 인권기구 참여 확대, 인권에 기반 한 개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납북자 및 국군포로 인권보호, 남한 장기수 인권보호, 남북 긴장 완화,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남북 간 이동권 보장, 이전의 자유 보장
국방부	군대 내 인권보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보장, 해외인권신장

국가기관	지표
법무부	피의자 인권보호,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선별 적용, 인권교육 강화, 법률구조, 외국인인권보호
환경부	환경지표 개선, 환경보전 (대기, 소음, 수질 등),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지구환경 보전, 환경관련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장, 공영 방송 강화, 통신자료 보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소외계층 및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참정권 보장, 투표 참여율 제고, 부정선거 예방

자료: 구정우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박노동(2017)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에서 재인용

표 2-9 |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인권지표: 주관적 인권지표(내부자 평가)

국가기관	지표
I. 인권의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과 인지(4문항) 인권인지(국내), 인권인지(국외), 국내의 인권존중, 인권침해 인지
II. 조직의 인권보호(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인권보호(2문항) 조직구성원 인권보호, 타조직과의 비교 • 조직 내 인권침해(2문항) 조직 내 인권침해유무, 조직 내 인권침해 발생 관계
III. 인권차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권(10문항) 출신학교에 따라, 성별, 근무고과에서, 공무원 노조 여부, 임용유형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입직 기수에 따라, 외모에 따라, 연령에 따라, 지역에 따라
IV. 인권침해(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권(7문항) 의사표현 무시, 상사의 의견묵살, 문화활동 제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통신(서신왕래)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사생활보호권(3문항) CCTV를 통한 감시 유무, CCTV를 통한 감시 평가, 개인정보 유출 • 평등, 인격, 노동, 안정 등 사회적 권리(6개 문항) • 진급승진의 차별, 상사로부터의 언어폭력,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억울한(불공정한) 처벌, 성희롱 피해, 휴일의 미보장
V. 인권침해 시 구제제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방어권(3문항) 구제제도 및 절차 유무, 구제제도의 공정성, 인권부서의 주체
VI. 인권교육(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권(5문항)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 유무, 인권교육의 유용성, 인권교육의 충실성,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의 관련성
VII. 리더십(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3문항) 부서장의 인권신장 동기부여, 부서장의 제도개선 노력, 부서장 인권신장노력 평가
VIII. 인권 배태적 서비스(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의 배태성(2문항) 인권친화적 서비스, 국민필요정보제공의 적극성 • 소수자의 인권(1문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료: 구정우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박노동(2017)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에서 재인용

표 2-10 |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인권지표: 주관적 인권지표(외부방문자 평가)

국가기관	지표
I. 인권의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과 인지(4문항) 인권인지(국내), 인권인지(국외), 국내의 인권존중, 인권침해 인지
II. 조직의 인권보호(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인권보호(4문항) 방문조직 공무원의 인권신장 노력, 방문조직의 인권문제의 심각성, 1년 전 상황과 비교, 다른 조직과 비교
III. 공무원으로부터의 차별(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인권보호(9문항) 직위나 직급에 따라, 성별에 따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조원 여부에 따라, 외모에 따라, 연령으로 인하여, 외국인이기에, 특정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IV. 인권침해 경험(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 보호권(3문항) CCTV를 통한 감시 유무, CCTV를 통한 감시 평가, 업무관련 개인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권(9문항) 방문조건이 까다로움, 공무원에게 의견전달 목살, 업무처리의 지연, 업무처리의 불투명성, 업무처리의 불공정함,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한 대우, 공무원의 강압적 태도, 공무원으로부터의 과도한 요구, 해당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처우
V. 리더십(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3문항) 부서장의 인권신장 동기부여, 부서장의 제도개선 노력, 부서장 인권신장노력 평가
VI. 인권 배태적 서비스(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의 배태성(2문항) 인권친화적 서비스, 국민필요정보제공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의 인권(1문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료: 구정우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박노동(2017)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에서 재인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국가 인권지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발전시켜 국가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수자(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그룹을 포괄하는 한국형 인권지표를 위한 지표 풀을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제안된 한국 인권지표 풀은 <표 2-1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각 영역의 권리와 관련되어 중요한 지표들만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표 2-11 |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의 한국형 인권지표 체계(안)

영역	세부 지표 풀(Pool)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안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률 • 사형 집행률 •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률
	〈신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집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학대사례 건수 •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건수 • 수용자 징벌 건수 • 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영역	세부 지표 풀(Pool)
적정 절차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포 후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비율 인권 침해발생 건수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변호사 선임비율: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 보상건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처벌비율
자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감청(통신소회, E-mail 검색, CCTV 촬영 등) 건수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건수(소송제기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의 자유〉 신체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증감비율 과학기술·학술교류 목적의 출·입국 불허비율 여권발급 거부 건수 장기입소 노인시설 외출허가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국가보안법의 입건자수 및 기소비율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형사 처벌 비율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 중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 국가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건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요청 거부 건수 기자와 미디어 보조원, 언론 활동가 등의 일시적 구금 및 수감 건수 정부의 언론·출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건수 인터넷게시물 심의건수 대비 삭제 결정 비율 자막방송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 건수 이주노동자 결사의 보장 건수 집회 및 시위자 부상자 비율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규제 개혁 건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 허용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건수 노조가입률
참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선거 재외국민 투표율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여성 정치인 공천 비율 청소년 정치참여권 보장 조례 제정 건수 참정권 피해 인권위 진정 건수 및 관련 소송 건수 투표장 무장애 환경 조성 비율
평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집단권리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 보장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대·상대빈곤율 평균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사회보험가입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최저생계비 대비 기초노령연금액 및 한부모가구 자녀양육비 공적연금·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비율
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산업재해 신고 중에서 판정건수 실업률 노동조합조직률 및 단체교섭 적용률 성별 장시간 근로자비율 격차 부당노동행위 건수 비정규근로자 비율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장률 산업재해율 지역별 활동 의사 수 주관적 건강상태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주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홀리스,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 쪽방 거주 인구 수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비율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의 주거권 보장법, 규정 여부 주거비 부담액 주거비 보조 제도(주택바우처 등)의 예산 증가율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주택공급률 강제퇴거 가구 수
교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중퇴자 비율 평생교육 참여 비율 사교육비 비율

영역	세부 지표 풀(Pool) [소수자 권리]
장애인	<p style="text-align: center;">〈이동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1대 당 등록 장애인 수 • 보행자 사고자 중 장애인 보행자 비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유도신호 장치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 접근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대비 자막방송 비율 • 일반인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 격차 • 각종 회의 등에서 수화 통역 및 점역 서비스 받아 본 비율 • 점역 도서를 제작·보급하는 국·공립 도서관의 수 및 일반자료 대비 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일반인 대비 장애인 주거 만족도 •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중 장애인에 대한 보급률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상승 추이 • 일반인 대비 장애인 임금 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의 일반학교 진학을 및 졸업률 • 특수교육대상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 • 전체 아동 대비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증가율 •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과 여성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을 경험한 비율 •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 경험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p style="text-align: center;">〈소비자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부 건수 • 심신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복지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등록 장애인수 •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액 및 증가율
여성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직 근로자 성비 • 성별육아휴직자 비율 • 부부가사노동시간
	<p style="text-align: center;">〈성폭력·성매매·성희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 직장내 성희롱 진정 건수 •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 • 성매매 알선 처벌 건수 • 가정폭력피해 경험률 •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비율 • 성구매자 교육 및 처벌 건수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국회의원 비율 •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아동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률 • 집단따돌림을 받은 경험률 •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단율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수 • 학대피해아동 비율 • 가출청소년의 비율 • 가출청소년중 청소년쉼터 이용률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사망률
	<p style="text-align: center;">〈복지·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률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혜율 •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청소년 비율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	<p style="text-align: center;">〈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빈곤율 • 가구소득 중 노인 개인 소득의 비중

영역	세부 지표 풀(P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태 만족도
	〈주거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소유율 • 지난 1년간 거주지역 변동율 • 최저주거기준 주택 거주율 •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시 불편한 사항 • 교통사고 경험률 • 운전율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 • 직업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권 침해 경험 • 경제활동참여 욕구대비 충족률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활동참여율 • 문화공연향유율 • 사회활동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참여율 • 자원봉사참여율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율 • 기능제한율 • 치매유병률 • 미충족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률 • 수발률 • 주관적 건강만족도 	
〈안전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 등 경험률 	
〈노인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 대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차별경험률 	
난민·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자격 인정비율 • 미등록 외국인 여행비율 • 미등록 외국인 출국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 난민 인정자를 위한 사회보장지원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자 취업률 • 북한이탈자 학교 중도 탈락률 • 북한이탈자 자활, 자립지원 건수

자료: 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에서 재인용

2 • 지방정부 인권지표 관련 주요 사례

1)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는 전체 시도 중 인권 관련 연구 및 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시이다. 광주는 ‘인권도시 광주’를 목적으로 도시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인권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11년 ‘광주형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광주는 광주형 인권지표 개발을 위해 도시의 역사성, 도시의 사회문화적 여건, 경제적 환경, 자연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광주는 국내·외 다양한 인권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광주의 내부적 여건과 연결시켜, 광주만의 특색 있는 인권지표를 구성하였다(김재철 외, 2011).

광주형 인권지표는 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②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③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④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광주형 인권지표는 5대 18장으로 이루어진 인권헌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영역별로 세부 실천 과제 18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과제를 관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실천 과제별 100개의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광주형 인권지표는 시민토론회 및 시민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2012년 처음 발표되었다. 그러나 100개로 구성된 인권지표가 너무 방대하고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지표에 대한 결과값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는 50개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19년 개정된 광주형 인권지표와 세부지표, 측정방법은 <표 2-1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주요 세부지표만 작성하였다.

표 2-12 | 광주광역시 인권지표의 세부 내용

5대 영역	인권지표	세부지표	측정방법 (산식)	
I.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1. 시민사생활 보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단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2. 시민의 행정 참여도	시 위원회 전체 위원 수 대비 시민위원 수	• 위원회 시민참여율(%) = (시민위원수/시 위원회 전체 위원수)×100	
	3. 행정정보 공개율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공개 건수	• 정보 공개율 : (공개+부분공개 건수/정보공개 청구건수)×100	
	4. 시민사회단체 조직률	인구수 대비 시민사회단체 조직률	• 인구 만명당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5. 기부 참여율	자원봉사자 참여율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수/주민등록총인구)×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자 수		• 기부 참여율 = (기부모금 참여자/당해연도 인구수)×100%
6. 인권교육 참여율	초·중·고교 인권교육실시 학교 비율		• (인권교육 실시 학교 수/초·중·고 학교 수)×100%	
II.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1. 비정규직 비율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 전체 비정규직률 = (비정규직수/전체임금 근로자수)×100%	
	2. 체불임금 해소율	체불임금 발생건수 대비 처리건수 비율	• (체불임금 해소건수/체불임금 발생건수)×100%	
	3. 사회적 일자리 수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수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일자리 창출	
	4.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이주노동자 노동관련 상담 건수	• 각 단체별 이주노동자 노동관련 상담 건수	
	5. 근로자 산업안전*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 당해연도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6.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	• 자살률: (자살 사망자수/연앙인구)×100,000명	
	7.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 수 /19세 이상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5대 영역	인권지표	세부지표	측정방법 (산식)
	8.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취약계층 수검자 수	•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자 수/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대상자 수)×100%
	9.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치매조기검진 인구수/만 60세 이상 인구 수)×100%
	10.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	• 공공임대주택 비율 = (공공임대 주택수/전체 주택수)×100%
	11. 장애인 학대 및 폭력 발생률	장애인 권침해(상담인권침해·학대) 상담건수 대비 구제건수	• (구제·해결 건수/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상담 건수)×100%
	12. 학교 내 폭력발생 및 구제	학생 천명당 피해 건수	• 학교폭력 피해 건수/학생 천명
Ⅲ.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1. 빈곤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전체 인구수)×100%
	2. 국민연금 납입자율	국민연금 대상자 수 대비 납입자 수	• 국민연금 납입자율 = (총 징수액/총 부과액)×100%
	3. 여성 대표성	전체 선출직수 대비 여성 당선자 수	• 여성 선출직 당선율 = (선출직 여성정치인수/선출직 전체 정치인수)×100%
	4. 여성 노동격차	15세 이상 여성인구 대비 여성취업자 수(취업률)	• (여성취업자/15세 이상 여성인구)×100%
	5. 돌봄·양육	시 공무원 전체 육아휴직자 수 대비 남성 휴직자 수	•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 (남성 육아휴직자수/전체 육아휴직자수)×100%
	6.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돌봄률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돌봄을 받은 아동 수	• 보호대상 전체 아동 수 대비 입양·그룹홈·위탁 가정 등 가정형 돌봄을 받은 아동 수
	7.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18세 미만 아동 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 이용률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18세 미만 아동 수)×100%
	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	전체 청소년수 대비 지원해준 청소년 수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 = (지원해준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100%
	9. 결식아동 지원율	결식아동 수 대비 결식아동 지원 수	• 결식아동 지원율 =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원/결식아동 수)×100%
	10. 노인요양 및 돌봄 서비스 수혜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수 대비 시설·재가급여 수혜자 수	•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혜율 = (시설재가급여 수급자 수/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수)×100%
	11. 장애인 고용률	시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장애인 공무원 수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 (장애인 공무원 수/전체 공무원 수)×100%
	1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중증장애인 1인당 월평균 활동보조지원 시간	•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인 활동보조시간(월평균 지원 시간)
	13.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수	3급 이하 장애인수 대비 직업재활시설 정원 수	• 직업재활시설 정원율 = (직업재활시설 정원 수/심한장애 장애인 수)×100%
	14. 여성장애인 출산	장애여성 출산 후 돌봄 지원율	• (수혜자 수/출산 장애여성 수)×100%
	15. 장애인 대학 진학률	장애인 대학 진학률	• (장애인 대학생 수/전체 대학생 수)×100%

5대 영역	인권지표	세부지표	측정방법 (산식)
	16. 이주민(외국인) 이동권과 언어소통권	전체 공공기관 수 대비 통역서비스 지원기관 수	• 외국인 언어소통 지원: 전체 공공기관 수 대비 통역서비스 지원기관 수
IV.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1. 대기오염도 저감	통합대기환경지수	• (각 항목 연평균 측정치/각 항목 국제환경 기준)×100%]/4
	2.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1인당 공원조성 면적	• (공원조성 전체 면적/인구수)×100%
	3. 녹색에너지 자립도	탄소은행 가입 세대수	• 탄소은행 가입 세대수
	4. 공공체육시설 수 확대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적정면적(목표) 대비 확보면적	• 공공체육시설 면적확보율 = (1인당 확보면적 / 1인당 확보 목표)×100%
	5.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전체 버스 대비 저상버스 수	• 저상버스 도입률 = (저상버스 수/전체버스 수)×100%
	6. 시각장애인 보행 시설 설치율	시각장애이용 음향신호기 설치율	• (당해연도 설치대 수/당해연도 설치목표 대수)×100%
	7. 치안 안전도	인구 만명당 5대 범죄 발생 수 대비 검거율	• (검거건수/5대범죄 발생건수)×100%
	8.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 (소방시설 보급가구 수/목표가구 수)×100%
	9.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	유통식품 검사 수 대비 부적합 식품 발생률	• (부적합 발생건수/당해연도 식품 등 검사건 수)×100%
V. 문화창조 연대도시	1.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1학급당 학생 수	• 총 학생 수/총 학급 수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액	• 당해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액
	3. 유·초·중·고·특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1인당 지원액	• (총 사업비/학생 수)/급식일수
	4. 청소년 시설 설치와 지원	청소년 시설 지원예산액	• 당해연도 지원예산액
	5. 공공도서관 접근도와 이용률	인구 4.5만명당 공공도서관 수	•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현황
	6.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문화소외계층인원 대비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수	• 수혜율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문화 소외계층 대상자)×100%
	7. 국내외 인권 교류·협력 건수	인권도시 정책협약 체결 건수	• 인권도시 정책협약 체결 건수
	8. 국가폭력피해자 치유 지원	국가폭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당해연도 참여자 수

자료: 광주광역시(2019) 내부자료
 주: * 2019년 신규 추가 지표에 해당

2)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는 대전의 인권 수준 개선과 적합한 인권정책 개발, 시민 참여형 인권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를 2017년 수행했다(박노동, 2017).

대전 인권지표는 대전의 인권 관련 객관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지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과 관련한 객관적 물리적 요소들로 구성된 ‘객관적 지표’와 인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및 인지 상태를 포함한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 인권지표는 ①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②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도시, ③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도시, ⑤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연대의 도시, ⑥ 도시의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 총 6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세부 실천 항목과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 대전형 인권지표의 체계



자료: 박노동(2017)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에서 재인용

대전형 인권지표는 120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주요 인권지표만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항목과 인권지표, 측정 방법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 대전형 인권지표의 체계

6대 영역	실천항목	인권지표	측정 방법
I.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1.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보장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 이념, 종교, 사상 활동에 있어 자유롭다고 느끼는 주관적 의식(설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한 해 동안 신고된 집회 중 허가 건수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언론, 출판 등에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자유의 정도(설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 시민들이 느끼는 사적인 생활의 보호 정도(설문)
	2.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시민참여	행정 정보공개율	• 시민의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 만족도(설문)
		시민의 행정참여정도	• 시민의 시 행정 참여에 대한 만족도(설문)
		시민자치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 한 해 동안 관련 조례 및 제도의 도입 건수
		시민사회단체의 조직률	• 시민사회단체의 수(인구 만명당)
		단체장의 리더십	• 단체장의 대화 및 소통에 관한 시민 만족도(설문)
II.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도시	1. 자유로운 노동의 참여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	고용률	• 15~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
		고용안정성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노동조합 조직률	• 대상 사업자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 수
		산업재해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 당 산업재해의 발생건 수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 당 발생건 수
		체불 임금 발생 및 구제 건수	• 임금노동자 1,000명 당 체불임금 피해자 수 • 전체 체불임금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직업훈련교육	• 지역의 직업훈련교육 예산 및 프로그램 수
	2.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 전체 시민 수 대비 지역 내 총생산
		도시 성장률	• 전년 대비 경제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증감률
		소득수준	• 가구원 전체의 지난 1년간 총소득액의 한 달 평균 소득
		소비생활	• 가구원 전체의 지난 1년간 총 소비 지출액의 한 달 평균 소비 지출액
	3.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보건 의료인력	• 시민 1인당 의료인력 수
		보건 의료시설	•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수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 의료서비스 만족도
		5대 질환 사망자 수	• 인구 10만명당 5대 질환 사망자 수
		자살 발생 수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스트레스 인지율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소아 예방접종률		• 만12세 이하 어린이 중 예방접종 받은 수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율		• 대상자(취약계층) 수 대비 수검자 수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이상한 비율 • 전체 인구의 비만 비율		

6대 영역	실천항목	인권지표	측정 방법
Ⅲ.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4.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전체 주택 중 최저기준에 미달한 주택의 수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가구 수 대비 주택면적의 총합
		노숙자 인구 수	• 인구 만명당 노숙자의 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수 대비 입주자의 수
		주거환경 만족도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방수상태, 난방상태, 환기상태 등)의 만족도
	5.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실현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 천 세대당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학교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 학생 천명당 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장애인 학대 발생 및 구제 건수	• 장애인 천명당 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 여성인구 천 명당 성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6. 자유롭게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 보장	학급당 학생 수	• 학급당 학생 수(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초·중·고·대)
		유치원 취원율	• 3~5세 인구 대비 유치원생 수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 전체 학생 중 무상급식 수혜학생 수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 전체 학생 중 학업 중단 학생의 수
		학업 스트레스	• 학업활동으로 인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초·중·고·대)(설문)
		평생학습 참여	•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만족도(설문)
	7.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문화 공간 접근도	• 인구 천명당 문화공간(공연시설, 전시실 등) 수
		도서관 이용환경	•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의 수
	1. 오염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 1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취약계층 인구 중 문화바우처 수혜자의 수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시의 문화예술 활동 예술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액
		대기오염도	• 통합 대기환경지수
		수질오염도	• 대전 주요 하천의 수질 오염정도
		소음공해도	• 환경기준치 대비 소음 공해 정도
		환경 피해민원 발생 및 구제	• 인구 천명당 피해민원이 발생한 수 • 전체 피해민원 중 구제 건수
		환경오염물질 배출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6대 영역	실천항목	인권지표	측정 방법
IV.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도시		1인당 공원 면적	• 1인당 공원 면적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 시민들의 도시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설문)
	2. 자유로운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여가활동 시간	• 시민 1인당 주당 여가활동 시간
		여가 프로그램	• 공공기관의 여가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동호회 활동	• 전체 시민 중 동호회 활동을 하는 시민 비율
		여가생활 만족도	• 시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설문)
	3. 장벽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보행자 사망자 수	• 시민 천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자전거 도로현황	• 자전거 도로 총연장 길이(km)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 법적 기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 점자보도블럭 설치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BF 인증 시설의 수
	4. 유해환경, 범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도시 이동환경에 대한 만족도	• 시민들의 도시 이동환경에 대한 만족도(설문)
		범죄발생 및 검거율	•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 범죄 검거율
		CCTV 설치 대수	• 도시의 CCTV 설치 대수
		교통안전도	• 자동차 만대 당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
		소방인력 총원율	• 소방인력 수요 대비 소방인력의 수
		유통식품 안전성	• 부적합 식품의 검사율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1.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 생활의 보장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 •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
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1인당 급여액	
결식아동 비율		• 만0~18세 인구 중 결식 인구의 비율	
사회복지예산		•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	
국민연금		• 국민연금 대상자 중 가입자의 수 •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2. 여성의 권리보장과 성 평등 실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의 비율
		여성의 노동조건	•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남성과 비교) •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남성과 비교) • 여성의 평균임금(남성과 비교)

6대 영역	실천항목	인권지표	측정 방법	
6대 영역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 비 취업 여성 중 결혼,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비율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 만0~5세 인구 100명당 보육시설의 수 • 직장 내 아동 보육시설의 설치 수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 휴가, 휴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설문) • 휴가, 휴직 이용 용이도에 대한 만족도(설문)	
	3.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 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	• 만0~18세 인구 중 센터 이용자의 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 위기청소년 중 지원 서비스 수혜자의 수	
		노인 취업률	• 65세 인구 중 취업자의 수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재가시설 급여를 수혜받고 있는 사람의 수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	무의탁 독거노인 비율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	• 65세 인구 중 무의탁 독거노인의 수 • 전체 등록 장애인 천명당 복지시설 수	
		장애인 특수/통합학교의 설치율	• 전체 학교(대학 제외) 수 대비 설치 학교 수	
		장애인 채용률	•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률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	• 중증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시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 3급 이하의 장애인 수 대비 직업재활시설의 정원 수	
	5.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 시민의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포용 및 관용도(설문)	
		외국인의 차별경험	• 대전시 거주 외국인 중 차별정도 및 경험의 인식정도(설문)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 대전시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 만족도(설문)	
		다문화 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 전체 다문화 가족 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수	
		외국인 언어 소통권	• 공공시설 중 다국어가 표기된 시설의 수 • 공공시설 중 언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수	
	V.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연대의 도시	1.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투표율	• 선거별 투표율(부정기)
			자원봉사 등록률 및 활동률	• 전체 인구수 중 자원봉사자 등록률 • 자원봉사 등록 인구 중 실제 활동인구 비율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 1인당 평균 자원봉사 횟수 •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헌혈봉사 참여율			• 전체 인구수 대비 헌혈 실적	
2. 지역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정도	•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설문)	
		공동체 사업 실적	• 대전사회적자본센터 공동체 사업 실적	

6대 영역	실천항목	인권지표	측정 방법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	사회적 소통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소통의 정도
		사회적 관계망	• 위기 상황 시 사회적으로 도움 받을 사람의 수
		사회적 신뢰	• 일반인에 대한 신뢰감
	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수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
		사회적 일자리의 수	•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의 수
		사회적 경제의 성장률	• 사회적 경제 조직별 성장률 • 사회적 경제 조직별 매출액
VI. 도시의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	1. 인권문화 실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행정	인권교육 참여율	• 전체 인구 중 인권교육 참여자의 수 • 전체 공무원 중 인권교육 이수자의 수 • 인권교육 실시 초·중·고의 비율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건수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액수
		국내 민관 인권협약체결 건수	• 국내 민관 기관과의 인권협약 체결 건수
		인권행정에 대한 만족도	• 시의 인권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설문)

자료: 박노동(2017)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지표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중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했다(김창기 외, 2022).

김창기 외(2022)는 중랑구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랑구 인권정책, 세부 사업, 인권지표 등을 제안하였다. 중랑구 인권지표는 총 4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지표는 목표치에 대한 달성률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중랑구 인권지표는 특정한 영역을 설정하기보다는 중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부 사업을 영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평가지표를 인권지표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구체적인 중랑구 인권지표의 영역과 세부지표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 중랑구 인권지표

구분	영역	세부지표
1	주민과 함께 「서울에서 최고로 깨끗한 중랑 만들기」 추진	단위 사업별 추진 횟수
2	범죄 그만!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CCTV설치(권고) 횟수
3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점검의 날 행사 횟수
4	다 함께 걷는 건강한 중랑 조성	온라인걷기 캠페인 개최 수
5	마을건강위원회 운영 활성화	마을건강위원회 회의 수
6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심리상담 및 검사 수
7	휴 관광도시 중랑 프로젝트 추진	공방거리축제 개최 수
8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	지역문화예술축제 개최 수
9	아동친화도시 조성	친화도시 인증요건 충족(%)
10	꿈과 희망을 주는 중랑장학사업	장학금 지급액
11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 운영	아동학대 현장조치 수
12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아동 사례관리 수
13	성평등활동센터 설치 및 운영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횟수
14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성인지역량강화 교육 횟수
15	양성평등정책 및 문화사업 추진	양성평등기금 지원 수
16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일자리제공 수
1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횟수
18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긴급돌봄 및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 지원
19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처리
20	장애인주차구역 관리강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21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수
22	치매걱정 없는 행복한 동행	치매 선별 검진 인원
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수
24	독거어르신 안전 건강관리솔루션	IoT기기 지원 대수
25	취약 재가 어르신 지원 서비스	무료급식 대상인원 수
26	복지 사각지대 주거생활 안정 지원	주택바우처 지급 제공 수
27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	노숙인지역 순찰 및 시설입소 횟수
28	자활 근로사업 추진	자활근로자 자활인력 배치인원
29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 센터 이용자 수
30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운영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수
31	주민과 구청장이 함께하는 중랑마실 운영	인권현장 방문 수
32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33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교육 횟수
34	인권위원회 활성화	인권위원회 개최 수
35	인권센터 설치 추진	인권센터 설치 추진
3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포상금 지원 횟수
37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
38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복지지원 제공 수
39	인권지표 및 지수 조사	인권지표 및 현황 조사 건수
40	인권영향평가 추진	인권영향평가 및 사전검토

자료: 김창기 외(2022) 「중랑구 인권 보장 및 중진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재구성

주: 인권지표는 사업의 달성률로 평가함. 20% 이하 2점, 21% 이상~40% 이하 4점, 41% 이상~60% 이하 6점, 61% 이상~80% 이하 8점, 81% 이상 10점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지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함께하는 인권 존중 지역공동체: 인권 도시 서대문”을 슬로건으로 서대문구 인권지표를 수립하였다.

자치구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영역으로 설정한 중량구와 달리 서대문구는 ①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참여, ② 인권 지향적 생활환경 조성, ③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④ 구민의 행복한 삶 실현, ⑤ 누구나 누리는 문화와 교육, 총 5개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실천조항과 43개 인권지표를 구성했다.

서대문구 인권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 서대문구 인권지표

영역	실천조항	인권지표	세부지표(측정방법)
I.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참여	1.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알 권리 보장	구민의 행정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위원회 연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건수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 인권주민회의 활동 참여율 구정평가단 활동 건수 청소년 참여위원회 제안 건수 구민기자단 블로그 콘텐츠 작성 건수
		구청의 구민참여 개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재문서 공개율 위원회 전체 위원 수 대비 위촉직 위원 수 협치 분과회의 정책제안 발의 건수 대비 채택 건수 위원회 개최건수 대비 회의록 공개율
	2. 민주적인 공동체와 인권문화 환경조성	인권교육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자 수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직원 인권교육 이수자 수 초·중·고 인권교육 실시 학교 비율 및 학급 수와 학생 수
		인권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관련 제도 도입률
II. 인권지향적 생활환경 조성	1.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쾌적한 환경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도(통합 대기환경지수) 1일 1인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처리비율
		녹색에너지 자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녹색제품 구매율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 친환경 보일러 지원율
	2. 건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훼손된 보도 정비실적 자전거 보관대 정비율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율 보행불편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건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건수 가로수 정비 건수 대로변 친밀한 가로환경물(화단, 벤치) 설치율

영역	실천조항	인권지표	세부지표(측정방법)	
	3. 모두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평균 이용자 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 법적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4.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치안 안전도	• 취약지역 cctv 설치 개소 수 • 취약지역 비상벨 설치 개소 수 • 자율방범대 활동실적(방범순찰 횟수) • 여성안심귀가 지원 수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율	
		안전한 먹거리 보장	• 공공급식센터 친환경 식재료 이용률 • 친환경급식 참여시설 수	
	Ⅲ. 사회적약자 인권증진	1. 아동, 청소년, 어르신 인권 보장 및 여성의 권리 보장	아동돌봄 및 보호	•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돌봄을 받은 아동 수 •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발굴 등록 수 •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건수 • 결식아동 급식 지원 수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률	
어르신 일자리 수			• 노인일자리 채용 비율	
여성대표성			• 5급 이상 공무원 수 대비 5급 여성공무원 수 • 위촉직 위원 수 대비 여성위원 수	
2.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 비율 • 시각장애인도서관 음성지원시스템 제작 건수	
3.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소수자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다문화 존중 및 인식개선	• 구 전체 예산 대비 다문화 관련 예산 •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참여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 기타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 개최 횟수	
Ⅳ. 구민의 행복한 삶 실현		1.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보장	사회복지예산 비율	• 구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사회적 경제 지원	• 사회적 경제 기업 수 •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액 달성률
			폭력과 학대 구제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건수 • 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횟수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 • 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 학교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지원율
	2. 성 평등 및 일과 생활의 균형	성평등 문화 확산	•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 성인지 교육 이수율	
		일과 가정의 양립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	•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
			유연근무 참여율	• 유연근무 참여율 •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수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

영역	실천조항	인권지표	세부지표(측정방법)
	3.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일자리 질 개선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 일자리사업 목표 달성률
		노동권의 역량강화	• 노동교육 참여율
	4. 쾌적한 주거권 보장	노숙인 인구수	• 인구 만명당 노숙인 수
		취약계층 주거지원	• 퇴거위기가구 긴급주택 확보 수 • 맞춤형 임대주택 확보 수
	5.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보장	자살률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취약계층 건강검진	•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자 수
		노인치매 조기검진	•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보건소 이용률	• 보건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예방접종률	• 만12세 여학생 HPV(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V. 누구나 누리는 문화와 교육	1.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리는 권리 보장	도서관 접근도	•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 연간 장서 증가 수
		문화예술 행사지원	• 연세로 민간주도 문화행사 지원 건수 • 찾아가는 문화나눔 건수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문화이용권 수혜 총대상자 대비 문화이용권 수혜자 수
	2.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균등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 보장	학급당 학생 수	• 초·중·고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
		학교밖 청소년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지원률
		청소년 학습 다양성 강화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수 및 참여자 수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 인구 천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 및 참여자 수

자료: 서대문구(2022) 「서대문구 인권지표」를 토대로 재구성

3 •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던 기존의 개발과 달리, 성장이 후속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자원을 이용하여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유엔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설정하였다. 이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개 목표에 따라 개발이 사회·환경·경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종식이 개발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UNDP 서울정책센터 홈페이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설립하고 있다. 현재 2024년 기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국제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의 상황을 함께 고려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 전략, 17개 목표를 두고 있다.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목표, 세부목표는 <표 2-16>과 같으며, 지면상의 한계로 지표 일부만 제시하였다.

표 2-16 |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전략	목표	세부목표	지표
I.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사람)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집단여부별)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변경
		•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유지
		•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농가소득 유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일부 수정
		•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 인구 1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모성사망비
		•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신설
		• 기후·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수	
	4. 모두를 위한	•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전략	목표	세부목표	지표
	양질의 교육	•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고등교육 이수율
		•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성인 문해율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
	5. 성평등 보장	•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		

전략	목표	세부목표	지표
	6.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저상버스 보급률
		•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 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미세먼지 나쁨 일수
		•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II.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번영)	1.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남녀 임금격차
		• 이주노동자, 연소근로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전체 재해율
	2.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 시설 구축	• 대다수 국민에게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 국가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경제활동 1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 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3.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소득격차비율
		•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소득 5분위 배율
		•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인구집단별 고용률

전략	목표	세부목표	지표
III.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환경)		•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 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4.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
		•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로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1.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 수질목표기준 달성도(TOC 기준)	
	•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 어류건강성 평가지수(FAI)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2.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수
		•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건물에너지효율지표
		•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 친환경차 확대 수

전략	목표	세부목표	지표
	3. 기후변화와 대응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 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방재시설 집행 비율
		•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4. 해양생태계 보전	•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해양쓰레기 수거량	
	•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갯벌복원면적	
	•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확대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5. 육상생태계 보전	•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한다.	• 주요 멸종 위기종 복원율	
	• 야생생물과 인간 사이 접촉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생물 밀거래를 근절한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외래생물 관리 대상 종수	
	•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도심/생활권 복원	

전략	목표	세부목표	지표
IV.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평화·협력)	1. 평화·정의·포용	•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범죄율(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 수
		•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 법률구조건수 증감률
		•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부패경험지수
		•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 강화 지원 비중
		•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	
	2. 지구촌 협력 강화	•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 GNI 대비 ODA
		•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 ODA 민간협력 재원의 비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제5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을 토대로 재구성

제4절 소결

인권은 문화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녔지만,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국제 선언이나 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정의하려고 시도해왔다. 이 중 인권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인권지표이다. 인권지표는 인권의 항목을 수치화, 단순화하여 인권 발전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인권지표는 지역 단위의 인권현황을 측정하여 지역 인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인권지표 중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지표와 EU 인권지표, 그리고 국제 인권지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통해 인권지표를 정량, 정성, 객관, 주관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복합적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각 과정에서 국가에 맞추어 맥락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권지표를 만들고 있다.

EU 인권지표는 유럽 국가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7대 세부 목표와 20대 세부 과제에 따라 인권지표를 구성하였다.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권지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16번 목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은 EU의 인권지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라 할 수 있다.

국내 인권지표로는 2000년대 이후 개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 인권지표, 지방정부의 인권지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개발한 객관적, 주관적 인권지표를 토대로 2012년 다양한 인구 집단을 포괄하는 한국형 인권지표를 제안하였다. 지방정부로는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권지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인권지표들은 국내·외 인권지표 선행연구, 인권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인권 수준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제 기준과 국내 상황을 함께 고려한 지표이며, 현재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2021~2040)는 4가지 전략과 17개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인권지표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국내 인권지표의 사례 및 현황들을 살펴본 결과,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인권지표를 참고하되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권지표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인권지표의 경우 2011년, 2012년에서 개발된 지표로 2024년 현재 기준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노인, 북한이탈주민, 난민, 장애인 등을 포괄하는 인권지표를 개발했지만, 2024년 현재 기준

에서 더욱 세밀하게 인권지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지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형 인권지표를 수립한 후 현실에 맞게 계속 수정 및 개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식을 설정해 매년 그 현황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지표 개발 기초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03

수원시 인권 및 지표 현황

제1절 수원시 인권행정 현황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1 · 수원시 인권행정 현황

1) 수원시 인권행정 연혁

수원시의 인권행정 관련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2013년 2월 경기도 최초로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3년 7월에는 인권 기본 조례를, 2015년 5월에는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986호)을 제정하였다. 2020년 6월에는 인권 기본 조례를, 2021년 2월에는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각각의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다음으로 2013년 11월부터 제1기 인권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인권위원회는 2년 단위로 15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제6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인권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이다.

수원시는 경기도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직속 인권전담조직(인권담당관)을 구성하였다. 인권센터는 2015년 5월에 개소되었으며,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인권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인권담당관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이전 감사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수원시 인권행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권문제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역 내에서 해결하려는 '인권의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4.04.).

수원시의 인권행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침해 실태조사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이다. 먼저 수원시는 2015년 7월 제1차 인권증진기본계획(2016~2018)을, 2019년 7월에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9~2023)을, 2024년 1월에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2019년, 2023년에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매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2016년 12월 이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6월 행정 전 분야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주요 수원시의 인권행정 관련 내용은 <표 3-1>과 같다.

이처럼 수원시는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굵직굵직한 인권행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 현재는 2013년부터 시작된 수원시 인권정책의 방향성을 되돌아보고, 이후 한 단계 나아간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인권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 | 주요 수원시 인권행정 연혁

주요 인권행정 업무	연혁
인권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수원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2015년 7월) • 제1차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2016년 1월) • 제2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2019년 7월) • 2020년 수원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2020년 3월) • 2021년 수원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2021년 3월) • 2022년 수원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2022년 3월) • 2023년 수원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2023년 3월) •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추진(2023년 9월~2023년 12월) •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2024년 1월)
인권침해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민 및 전문가, 공무원 대상 수원시 인권실태조사(2013년 10월~2014년 10월) •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2021년 2월~2021년 6월) •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2022년 9월~2022년 10월) • 수원시 공직자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2023년 8월~2023년 9월)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화성행궁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2016년 8월)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확대 추진계획 수립(2016년 12월) • 2017 시민의 정부 핵심과제 인권영향평가 선정(2017년 1월) •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2017년 2월) • 제1기 수원시 인권영향평가협의회 구성·위촉(2017년 9월) •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2018년 5월) • 행정 전 분야 인권영향평가 제도화(2018년 6월) • 제2기 수원시 인권영향평가협의회 구성·위촉(2019년 10월)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2020년 4월) • 2022년 양대 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2021년 12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2024년 2월)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2024.04.12.) <https://www.suwon.go.kr/index.do>

2) 2024년 수원시 주요 업무계획

2024년 수원시의 인권관련 행정 업무는 인권정책팀과 인권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 업무는 인권정책팀에서, 인권실태조사나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 수원시 인권행정 담당부서 조직도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2024.04.12.) <https://www.suwon.go.kr/index.do>

인권정책팀은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및 평가하며 인권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인권교육이나 인권포럼을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업무를 맡고 있다. 인권센터는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 중이다(〈표 3-2〉 참조).

표 3-2 | 수원시 인권행정 담당부서 업무

부서	담당업무
인권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평가 •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교육 추진, 인권증진 보조사업 추진 •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업무 • 인권포럼 및 대외협력사업 추진(한국인권도시협의회 등)
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구제업무 • 정책·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 • 인권실태조사 •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정책·공공건축물) • 성희롱 고충상담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자료: 수원시(2023b) 내부자료

2024년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강화, ② 강력한 인권 보장제도 운영, ③ 인권친화적 문화 구축, ④ 시민 속 인권가치 확산에 해당한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 2024년 수원시 인권정책 목표 및 방향



자료: 수원시(2023b) 내부자료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2024년에 총 8개의 사업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제시하였으며, 인권정책팀과 인권센터 각각 4개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현안 및 주요업무로는 ① 함께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인권정책 추진, ②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③ 시민 속으로 인권존중 문화 확산, ④ 인권친밀도 1℃ 높이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⑤ 수원시민 누구나 인권 보장 시스템 운영, ⑥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한 주기적 인권실태조사가 있다. 또한 2024년의 신규사업으로는 ① ‘인권센터 뉴스’ 전파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② 시민 인권을 더 빛나게, 인권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의 내용은 <표 3-3>과 같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인권지표 개발의 경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근거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현재 수원시의 인권실태 및 수준을 파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 3-3 | 2024년 수원시 인권행정 부서별 주요업무

담당부서	사업명	내용	비고
인권 정책팀	함께 만들고, 모두가 참여하는 인권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력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의 체계적 관리 수원시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안 및 주요업무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급별·직무별 공직자 인권교육 체계적 운영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평가체계 마련 교육수요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인권교육 체계화 및 허브(Hub) 역할 강화 	현안 및 주요업무
	시민 속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형 시민 인권교육 추진 인권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민관 협력 인권증진 보조사업 운영 	현안 및 주요업무
	시민 인권을 더 빛나게, 인권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형 인권지표’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인권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 	신규사업
인권센터	인권친밀도 1℃ 높이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인권침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 맞춤형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권 행정 구현 	현안 및 주요업무
	수원시민 누구나 인권 보장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구제업무 기능 강화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수원시 인권 보장 거버넌스 추진 수원시 인권센터 홍보 강화 	현안 및 주요업무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한 주기적 인권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공직자,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4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현안 및 주요업무
	‘인권센터 뉴스 전파’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센터 뉴스 사례 선정 및 카드뉴스 제작 행정포털(내부망) 및 공문형태 배포 	신규사업

자료: 수원시(2023b) 내부자료

2 •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원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인권이 실현되는 사람중심 수원’이라는 비전에 맞추어 ‘수원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의 보편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상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 주민, 수원시민 전체에 해당한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자료: 이영안 외(2015)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18)」에서 재인용

이후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적 인권도시', '보편적 인권도시', '실천적 인권도시'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책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도시 환경조성', '인권문화 확산', '인권행정 제도 내실화', '인권 거버넌스 강화' 총 다섯 가지이며, 각 목표에 맞춰 16가지의 중점과제와 4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추진방향,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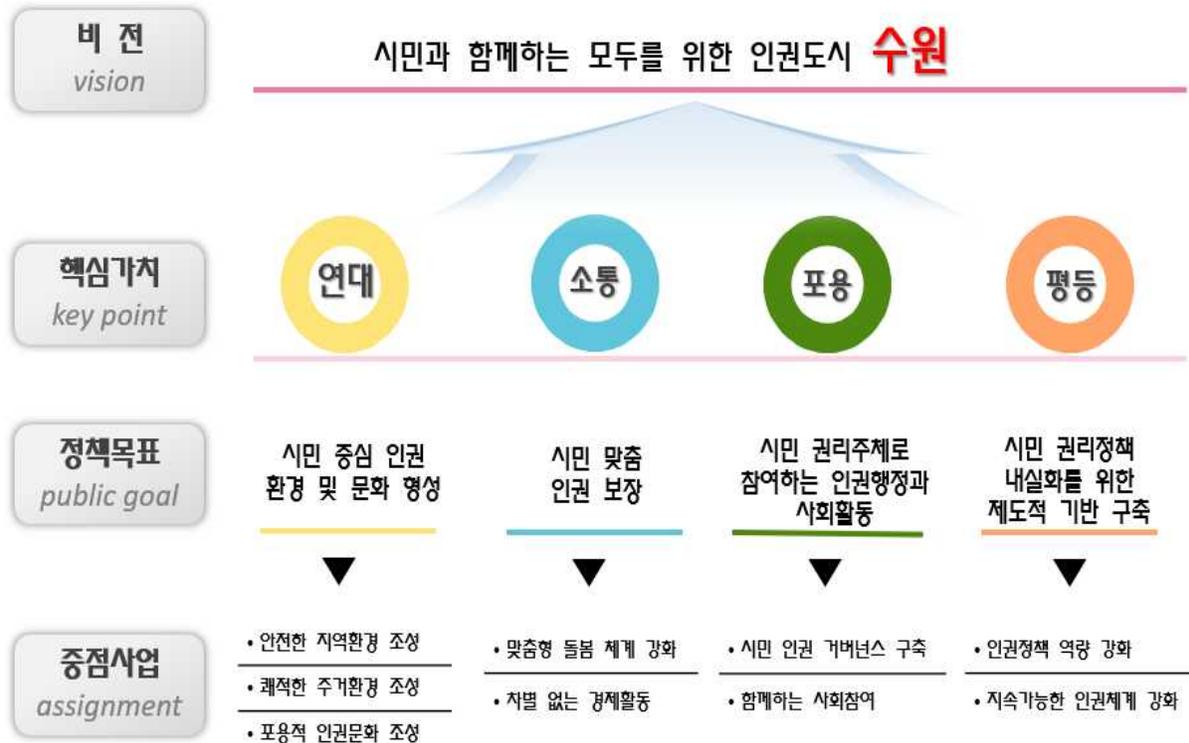
자료: 이영안 외(2019)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재인용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연대, 소통, 포용, 평등 네 가지를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정책목표는 ①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② 시민 맞춤형 인권 보장, ③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④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총 네 가지이다. 각 정책목표에 맞춰 중점사업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의 중점사업으로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시민 맞춤형 인권 보장의 중점사업에는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차별 없는 경제활동이 있다.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의 중점사업으로는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함께하는 사회참여가,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정책 목표에는 인권정책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가 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 및 중점사업



자료: 이영안 외(2024)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재인용

제2절 수원시 통계 및 선행지표 현황

1. 수원기본통계

수원기본통계는 수원시에서 1961년부터 시행된 통계로서 수원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통계 지표로 나타낸 자료이다. 수원시 인구부터 노동 현황, 주택·건설, 교통·관광, 사회보장, 교육 및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지역별(구·동), 성별, 연령별로 분류하고 있다.

수원기본통계는 매년 거의 대동소이한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2022년에 시행된 수원기본통계 항목은 <표 3-4>와 같다.

표 3-4 | 2022년 수원기본통계 항목

영역	항목
토지 및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 토지 지목별 현황 일기일수 기상개황 강수량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추이 구·동별 세대 및 인구 구·동별 연령(5세 계급) 및 성별 인구 연령(5세 계급) 및 성별 인구 인구동태 인구이동 시·군·구별 인구이동 주민등록 전입지별 인구이동(타시도→수원시) 주민등록 전출지별 인구이동(수원시→타시도) 외국인 국적별 현황 외국인과의 혼인 사망원인별 사망 여성가구주 현황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인구 총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 총괄 구·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농림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 및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촌진흥지역 지정 과실류 생산량 농업협동조합 가축사육 가축전염병 발생 수의사 현황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관계업소 임산물 생산량 수렵 수렵면허증 발급 식량작물 생산량(정곡):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류 생산량 특용작물 생산량 사방사업 실적 조림 불법 산림훼손 피해현황 어선보유 수산업종별 생산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현황 화훼 재배현황 농업기계 보유현황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및 제조업(10인 이상) 구·동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중분류별) 광업 및 제조업(10인 이상)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10인 이상) 산업 및 농공단지 석유류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생산량(고유단위)
전기·가스·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현황 용도별 전력사용량 제조업종별 전력사용량 가스 공급량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량 도시가스 보급률 고압가스 시설현황 상수도 보급현황 상수도관 급수 사용량 급수사용량 부과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사용료 부과 하수관거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업체 현황 금융기관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소비자 물가지수 농수산물 도매시장별 유통량 농림수산물 수출입 실적 해외시장개척 추진실적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실적

영역	항목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현황 및 보급률 • 주택소유현황 • 건축연도별 주택 • 연면적별 주택 • 건축허가 • 용도별 건축허가 • 아파트 건립 • 주택가격지수 • 지가 변동률 • 토지거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개발제한구역 • 공원 • 하천 • 하천부지 점용 • 도로 • 도로시설물 • 교량 • 건설장비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연료 종류별 등록 • 업종별 운수업체 • 천연가스버스 현황 • 자전거도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 철도수송 • 관광사업체 등록 •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보건 및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 보건소 인력 • 의약품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 식품위생 관계업소 • 공중위생 관계업소 • 예방접종 •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및 사망 •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 결핵환자 현황 •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실적 • 모자보건사업 실적 • 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보험급여 •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취학 •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여성복지시설 • 여성폭력상담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 장애인 등록현황 • 노숙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 묘지 및 봉안시설 •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적 • 보건교육실적 • 어린이집 • 자원봉사자 현황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현황 • 독거노인 현황(성별) • 독거노인 현황(연령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 •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대기오염 • 소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거 • 생활폐기물 매립지 • 폐기물 재활용률 •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복지현황

영역	항목
교육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총 개황 • 유치원(공립)(사립) • 초등학교 • 중학교(국·공립) • 중학교(사립) • 일반 고등학교(국·공립) • 일반 고등학교(사립) • 특성화 고등학교(국·공립) • 특성화 고등학교(사립) • 특수목적 고등학교(국·공립)(사립) • 자율 고등학교(국·공립)(사립) •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 기타학교 • 적령 아동취학(입학상황) • 사설학원 • 공공 도서관 • 박물관 • 문화재 • 예술단 • 문화공간 • 체육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언론매체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부담 • 지방세 징수 • 예산·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 • 일반회계 세출결산 • 특별회계 예산결산 •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 지방재정 자립지표
공공행정 및 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총괄 • 본청 공무원 •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회사무처 공무원 • 구청 공무원 • 동 공무원 • 소방 공무원 • 경찰 공무원 • 퇴직사유별 공무원 •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 민원서류 처리 • 화재발생 •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 장소별 화재발생 • 산발발생 현황 • 소방장비 • 119 구급활동 실적 • 119 구조활동 실적 • 풍수해 발생 • 소방대상물 현황 • 위험물제조소 설치현황 • 교통사고건수(자동차) • 자동차단속 및 처리

자료: 수원시(2023d) 「제62회 2022 수원기본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2 · 수원시 사회조사

수원시 사회조사는 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 수원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생활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측정하는 자료이다. 중앙과 달리 지역 중심의 통계 자료이기에 좀 더 면밀하게 지역사회의 생활수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며, 지역에 특화된 장·단기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시 사회조사는 2012년부터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어 연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조사를 중단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3년에 시행된 제11회 수원시 사회조사이다.

조사항목은 크게 기본항목, 일반항목, 수원시 특성 항목으로 나뉜다. 기본항목은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일반항목의 경우 격년 주기로 다른 분야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가족과 가구, 환경, 보건, 교육, 사회통합과 공동체, 안전 분야를, 2023년에는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분야를 질문하였다. 시 특성 항목은 수원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항들이며, 매년 항목들을 조금씩 달리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수원시 사회조사의 항목은 <표 3-5>와 같다.

표 3-5 | 2022년, 2023년 수원시 사회조사 내용

연도	기본항목	일반항목		시 특화 항목
2022	주택형태, 점유형태,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 월평균 소득, 평소 경제활동	가족과 가구	부모 생존 여부,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부모 동거 여부, 분거가족과 분거이유, 결혼에 대한 견해, 맞벌이 부부, 출산,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이상적인 자녀 수, 가족관계 만족도, 미취학 아동 보육, 우선 보육 지원, 반려동물	거주지 소속감, 거주지 만족도, 거주지 불만족 이유, 여성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이용, 도서관 이용과 만족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도시공원 이용과 만족도, 의료기관 이용과 만족도, 가장 필요한 복지욕구(서비스) 유형, 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인식도, 스마트 기기 사용, 희망하는 임대주택 유형, 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환경	환경 체감도, 환경오염 방지 노력, 환경보호활동 참여	
		보건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소 이용	
		교육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통합과 공동체	삶에 대한 만족감,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지원, 공동체 의식,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2023	주택형태, 점유형태,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안전	CCTV 운영,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일상생활 두려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책홍보, 도서관 이용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 도시공원 이용과 만족도, 보건소 이용 만족도 및 개선 방향, 가장 필요한 복지욕구(서비스) 유형, 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반려동물, 공공 데이터
		복지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노인이 느끼는 문제, 노후준비, 1인 가구 지원정책, 돌봄서비스	
		주거와 교통	지역거주기간 및 향후 거주의향, 정주의식, 거주지 소속감, 주거환경 만족도, 필요 공공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통근·통학 여부, 교통수단 및 시간, 교통수단 만족도	
		문화와 여가	삶에 대한 만족,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여가활동 만족도, 관광 경험 및 개선방안	
		교육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교육의 효과, 교육환경 만족도	
		소득과 소비	소득분배 정도,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생활비 지출,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부채유무 및 원인, 가구 월평균 소득	
일자리와 노동	직업선택 요인, 일자리 충분도,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장애요인			

자료: 수원시(2022b), 수원시(2023c)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

주: * 해당 문항은 19~54세 미취업 여성만 작성

3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년에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수원시는 2017년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하였다.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경제·사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10개 목표, 57개 세부 목표, 15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① 민관 거버넌스, ② 시민참여, ③ 모두를 위한 목표, ④ 대중성 있는 목표, ⑤ 실행력 담보라는 총 다섯 가지 원칙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정립하였으며, 시민토론회나 워크숍을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수원시, 2022a).

2023년 기준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체계는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체계

비전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3대 분야	환경 밝고 맑은 도시환경	경제 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	사회 오순도순한 사회공동체
10개 목표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2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활다양성 3 맑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5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7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 8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9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 10 가치를 통한 정의·평화 협치 구축
57개 세부 목표	SDGs 1 1 에너지 자립과 착한 에너지 생산 2 에너지 절약과 더 현명한 도시 설계 3 에너지 복지 실현 4 생태교통 확산 및 대기질 개선 5 탄소배출 감소 6 도심온도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7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참여 활성화	SDGs 4 1 지역먹거리체계와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2 시민의 먹거리 권리보장 3 지역농가와 먹거리생산자의 소득보장 4 시민 식생활교육과 건강한 식생활 정착	SDGs 7 1 시민행복지수 향상 2 최저 생활 보장과 빈곤종식 3 건강서비스 증진과 예방적 관리 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5 부편의무교육의 질적 심화 6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 활성화 7 도서관의 다양화, 활성화, 접근성 강화
	SDGs 2 1 8대 강대종과 기후변화 지역 지표중 모니터링 2 야생생물보전지역 확대 관리 3 자연지역 비율 확대 4 생물다양성 교육 및 시민 인식 증진 5 생물서식지 보존을 위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안착	SDGs 5 1 좋은 일자리 창출 2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3 창업하기 좋은 도시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완성 5 영세 및 중소기업 성장 촉력 6 수원 산업혁신 사회기반 조성	SDGs 8 1 성평등 교육의 질적 강화 2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3 성폭력 증식 4 거주 외국인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5 다문화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개선
	SDGs 3 1 하천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물환경 생물축적량 모니터링 2 하천 및 호소 수질 개선 3 시민참여형 물관리 체계를 위한 인식증진 4 물 자급률 확대와 불철약 실천 5 빗물투수층 면적 확대	SDGs 6 1 녹색상품의 구매 확대 2 녹색인증기업 지원 3 소비절약 및 생활쓰레기 감축 4 녹색상터 활성화 5 자원순환 인식 증진 6 지속가능한 관광 7 사회적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적 경제	SDGs 9 1 도시환경용량에 기반한 도시 관리와 기초 서비스 향상 2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공공 임대주택 확대 3 시민의 주거비용 완화와 사회주택 추진 4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접근성 보장 5 문화향유 및 시민문화 활성화
111개 평가지표	32개 지표	29개 지표	50개 지표
92개 추진사업	26개 사업	29개 사업	37개 사업

자료: 수원시(2023a) 「2023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적」에서 재인용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와 세부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사업을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이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평가지표 또한 마련하고 있다. 2017년 처음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만들어졌을 때는 100개의 이행과제⁵⁾와 152개의 평가지표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후 2023년 기준 92개의 추진사업과 111개의 평가지표로 축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세부목표 및 평가지표는 <표 3-6>과 같다.

표 3-6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세부목표 및 평가지표

분야	목표	세부목표	평가지표
환경	I.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1. 에너지 자립과 착한 에너지 생산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 에너지 절약과 더 현명한 도시설계	• 총에너지 사용량 •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금액
		3. 에너지 복지 실현	•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건수
		4. 생태교통 확산 및 대기질 개선	• 친환경차량 등록 비율 • 대중교통 분담률 •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농도
		5. 탄소배출 감소	• 온실가스 총 배출량 •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
		6. 도심온도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 수원시 극한 기후 발생일
		7.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참여 활성화	• 기후변화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 수
	II.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다양성	1. 8대 깃대종과 기후변화 지역 지표종 모니터링	• 서식지 모니터링 장소 수 • 서식지 모니터링 횟수
		2.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관리	• 수원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수 감소 • 주요 생물종 재도입 및 서식공간 조성사업의 수 • 주요 생물종 재도입 및 조성사업 서식공간 사후 관리 모니터링 수
		3. 자연지역 비율 확대	• 수원시 자연지역 비율
		4. 생물다양성 교육 및 시민인식 증진	• 학교 생물다양성 교육 횟수 • 수원시 지원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수
		5. 생물서식지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안착	• 수원시 서식지 보존 연간 시민참여자 수
	III. 맑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	1. 하천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물환경 생물측정망 모니터링	• 4대 하천의 구간별 물리적 구조물 • 4대 하천의 구간별 생물종 수 • 하천생물조사 예산 • 하천생태계 평가를 위한 공식 모니터링 장소 수 • 수원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수 감소 • 4대 하천 및 호소 수질현황 평균
		2. 하천 및 호소 수질 개선	• 수원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수 감소

5) '이행계획'이라는 용어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이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분야	목표	세부목표	평가지표	
			• 4대 하천 및 호소 수질현황	
		3. 시민참여형 물관리체계를 위한 인식증진	• 수원시 물환경 물순환 교육 참여자 수	
		4. 물 자급률 확대와 물절약 실천	• 수원시 물 자급률 • 수원시 1인당 물 사용량 • 수원시 물재이용시설 처리용량	
		5. 빗물투수층 면적 확대	• 수원시 빗물순환 사업 투수 면적 • 수원시 연간 지하수 평균 수위	
경제	IV.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1. 지역먹거리체계와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 먹거리 기본계획 이행률	
		2. 시민의 먹거리 권리 보장	• 공공급식 혜택 시민의 수	
		3. 지역 농가와 먹거리생산자의 소득 보장	• 농지 면적 •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매출액	
		4. 시민 식생활교육과 건강한 식생활 정착	• 도시농업 지원예산 • 식생활교육 참여자 수 • 식재료 안정성 검사 예산액	
	V.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1. 좋은 일자리 창출	• 수원시 고용률 • 임금노동자 대비 상용노동자 비율	
		2.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	•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 산재 사망만인율	
		3. 창업하기 좋은 도시	•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	
		4. 사회적 경제 생태계 완성	• 사회적 경제 기업 등록 수 • 사회적 경제 고용인력 •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률	
		5. 영세 및 중소기업 성장 장려	• 중소기업 수 • 중소기업 지원 예산 • 공공기관 중소기업 물품 구매 비율	
		6. 수원산업혁신의 사회기반 조성	• 기술개발 지원 예산 • 수원시 고용률	
	VI.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 녹색상품의 구매 확대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비율	
		2. 녹색인증기업의 지원	• 녹색기술인증 수 • 녹색기술제품 확인 수	
		3. 소비절약 및 생활쓰레기 감축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4. 녹색장터 활성화	•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 횟수	
		5. 자원순환 인식 증진	• 자원순환 교육 개최 수	
		6. 지속가능한 관광	• 관광객 수	
		7. 사회적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적 경제	•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비율	
	사회	VII. 복지·건강· 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	1. 시민행복지수 향상	• 삶에 대한 만족도
			2. 최저 생활 보장과 빈곤종식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도 • 기초연금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3. 건강서비스 증진과 예방적 관리	•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분야	목표	세부목표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관련 지표 없음)	
		5. 보편·의무교육의 질적 심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6.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평생교육 예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7. 도서관의 다양화, 활성화, 접근성 강화	• 도서관 예산	
		VIII.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1. 성평등 교육의 질적 강화	• 성평등 교육 예산
			2.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위원회에서 여성 (부)위원장 비율 • 수원시 공공기관 간부의 성비율
3. 성폭력 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건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및 처벌 건수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예산 			
4.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 수원시 예산 중 다문화에 관련된 예산			
5. 다문화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학교의 다문화 인식개선 • 수원시 공공기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IX.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1. 도시환경용량에 기반한 도시관리와 기초서비스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인구밀도 • 1인당 생활복지 면적 		
	2.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 수원시 독자적 공공임대주택 수		
	3. 시민의 주거비용 완화와 사회주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민의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 전체 가구 수 대비 세입자 비율 		
	4.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 수원시 1인당 문화기반시설 면적 •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 건수 		
	5. 문화향유 및 시민문화 활성화	• 문화시설 관람객 수		
X.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 협치 구축	1. 동별 자치역량 강화	• 자치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수		
	2. 모두를 위한 포용적 거버넌스(협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정책 추진 관련 거버넌스 조직 협의 횟수 • 시민의 정책제안 채택 건수 •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의 행정위원회 참여 비율 		
	3.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치 • 수원시 공무원 청렴도 평가지수 		
	4. 모두를 위한 안전도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강력범죄 발생 건수 • 수원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 		
	5. 행정, 기업, 시민의 인권의식과 민주시민성 증진	• 공무원, 공공기관의 법정교육 중 인권교육 이수율		

자료: 수원시(2023a) 「2023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적」을 토대로 재구성

제3절 소결

수원시는 2013년 2월 경기도 최초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면서 인권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수원시의 인권 행정 현황은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① 인권전담부서 설치, ② 인권조례 제정, ③ 인권위원회 구성, ④ 인권침해 실태조사, ⑤ 인권센터 설치, ⑥ 인권도시 실현, ⑦ 인권담당관 설치이다. 이 중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주요 인권행정 관련 업무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24년 현재는 2028년까지 지속되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의 인권 행정 중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은 인권지표 개발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인권행정은 인권정책팀과 인권센터에서 나누어 맡고 있으며, 이들은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실태조사 외에 인권 교육이나 인권경영, 인권침해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은 수원시가 인권행정을 수행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인권정책팀은 올해 신규사업 중 하나로 ‘시민 인권을 더 빛나게, 인권지표 개발’을 선정하였다. 인권지표 개발은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수행한 인권행정을 되돌아보고, 수원시에 걸맞은 인권의 지역화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원시 인권지표의 기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수원시에서 시행한 통계와 선행지표를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수원기본통계는 수원시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매년 발행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수원기본통계가 객관적인 수원의 현황에 대해 통계지표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원시 사회조사는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수준에 대해 묻고 시민이 느끼는 문제점, 만족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이다. 특히 수원시 특화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적합한 정책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으로 재구성된 목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권지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지표 개발에서 기존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테두리에서 인권지표를 측정하여 관리하는 등 인권지표와의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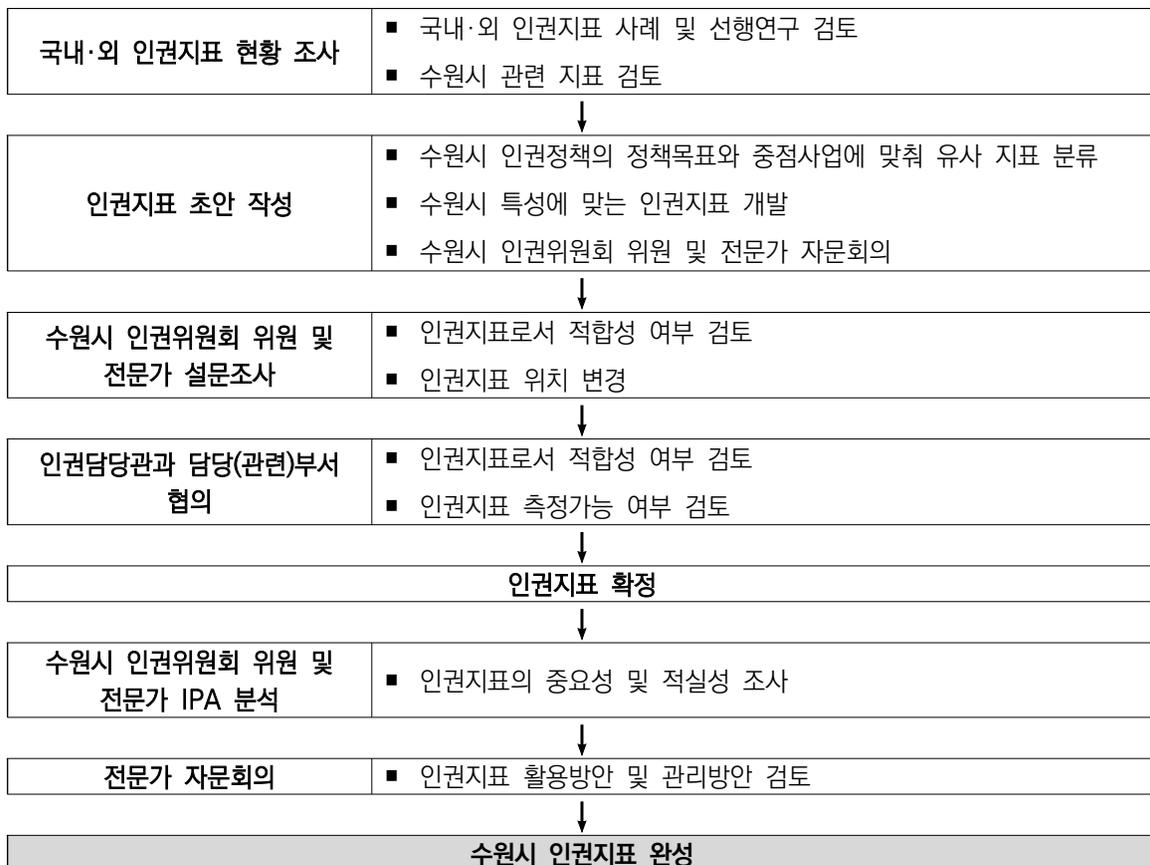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제1절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절차 및 방향

1.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절차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인권지표 사례 분석과 선행연구 검토, 수원시 관련 지표 검토,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인권위원회 및 담당(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시행 등을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절차는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절차



2 • 수원시 인권지표 방향

수원시 인권지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기존 인권행정 현황과의 연계성 고려이다. 수원시는 2013년 인권전담부서 설치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인권조례 제정,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10년 이상 인권행정을 시행하면서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왔으며, 인권위원회 및 인권담당관을 구성함으로써 행정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시 인권지표는 이와 같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지표의 영향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수원시 인권지표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와 9개 중점사업에 맞추어 구성함으로써, 수원시 인권현황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수원시민의 인권지표 체감도 향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인권지표와 관련 선행연구를 가장 먼저 검토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만들어진 인권지표이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 수원시 현황에 맞지 않는 지표 또한 존재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들의 인권지표 중 수원시 인권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수원시 인권정책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수원시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수원시 인권지표에 추가하였다.

셋째, 인권지표로써 실행 가능성이다. 인권지표를 인권 증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권담당부서의 역할뿐 아니라 시의 모든 부서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수원시의 인권전담조직인 인권담당관과 소통하면서 인권지표를 완성해갔다. 먼저 인권담당관이 연구진에게 전달받은 인권지표 초안을 검토하고, 각 지표에 맞추어 적합한 담당 부서를 분류하였다. 이후 시의 부서에 이를 전달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인권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인권지표를 확정하였다.

제2절 수원시 인권지표의 선정

1 • 인권지표 선정을 위한 신규지표 전문가 조사

수원시 인권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3장에서 제시되었던 수원기본통계, 수원시 사회조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서 생산 및 측정 가능한 지표를 먼저 추출하였다. 이 세 가지 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수원시 인권지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권지표를 구성하고, 적합성 여부

를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질문지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 9개 중점사업을 토대로 타 지방자치단체를 인권지표를 참고하여, 수원시에 새롭게 필요한 인권지표에 대한 기본내용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98개 문항을 총 11명의 전문가에게 적합성 여부(○, ×)를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적합성 여부 중 총 6개 이상의 필요로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으며, 향후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지표와 통합 및 재배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지표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번 정책목표인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형성은 수질오염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준수율, 자전거 도로 현황, 공공도서관 접근도, 여가 프로그램 이외에는 모두 적합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둘째, 2번 정책목표인 시민맞춤 인권 보장은 유치원 취원율, 창의학습 기회제공, 수원시 교육예산 보조, 국민연금 납입자율, 지역 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도시 성장률, 사회적 경제의 성장률 이외에는 모두 적합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셋째, 3번 정책목표인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은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자원봉사 등록률 및 활동률, 헌혈봉사 참여율 이외에는 모두 적합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넷째, 4번 정책목표인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전체 항목 모두 적합한 지표로 선정되었다.

다만 본 전문가 조사결과는 적합성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표의 경우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표의 조정으로 실질적 지표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표 4-1 | 수원시 인권지표 적합성 여부 분석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수질오염도	• 주요하천 수질 오염정도
		시민 사생활 보호	• 시민의 사생활보호 만족도(설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지수
		학교폭력 발생 및 구제	• 학생 천 명당 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건수
		장애인 학대 및 폭력 발생 및 구제	• 장애인 천 명당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준수율	• 측정 대상수 대비 공기질 유지 건수
		보행자 사망자 수	• 시민 천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노숙자 인구 수	• 인구 만 명당 노숙자의 수
		자전거 도로 현황	• 자전거 도로 총연장 길이(Km)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 • 전체 택시 중 전용택시 비율(1·2급 등록장애인 수 대비)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 음향신호기 설치율 • 점자보도블럭 설치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BF 인증 시설 수
		도시 이동환경 만족도	• 시민들의 도시 이동환경에 대한 만족도(설문)
		치안 안전도	•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 범죄 검거율
		CCTV 설치 대수	• CCTV 설치 대수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 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해소율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2. 시민 맞춤형 인권 보장		소방인력 총원율	• 소방인력 수요 대비 소방인력 수
		유통식품 안전성	• 부적합 식품의 검사율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수 대비 입주자의 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전체 주택 중 최저기준에 미달한 주택 수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가구 수 대비 주택연면적의 총합
		주거환경 만족도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의 만족도
		주거환경 최저수준 미달 주택 수	• 전체 주택수 대비 최저기준 미달 주택 수
		도시개발에 의한 이주자 주거권 보호	• 이주 가구수 대비 주거 확보 가구수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공공도서관 접근도	•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
		여가활동 시간	• 시민 1인당 주당 여가활동 시간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취약계층 인구 중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여가 프로그램	• 공공기관 여가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
		시민인권교육	• 시민의 민주, 인권, 봉사, 배려 의식 정도(설문)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 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만 0~18세 인구 대비 센터 이용자 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 위기청소년 중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노인 취업률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대비 재가시설 급여 수혜자수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 전체 보육시설 수 대비 특수보육 지정 수	
장애인 복지시설 수		• 전체 등록 장애인 천 명당 복지시설 수	
장애인 특수/통합학교 설치율		• 전체 학교(대학 제외) 수 대비 설치 학교 수	
장애인 특수/통합학교(학급 설치율)		•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 대비 설치 학교 수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장애인 채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률 • 민간부문 장애인 채용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 중증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시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 3급 이하 장애인 수 대비 직업재활시설 정원 수
		장애인 평생학습(정보교육포함) 접근도	• 장애인 전용 평생학습운영 기관 수
		일반여성 대비 장애여성 출산율	• 전체 출산율 대비 장애여성 출산율
		5대 질환 사망자 수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법정감염병 감염자 수	•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
		소아 예방접종률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수 대비 접종자 수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율	• 대상자(취약계층) 수 대비 수검자 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율	• 전체 인구수 대비 1회 이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율
		유치원 취원율	• 3~5세 인구 대비 유치원생 수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 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 스트레스	• 학업활동으로 인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초·중·고·대)(설문)
		과중한 학습 스트레스	• 학습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설문)
		창의학습 기회제공	• 학교별 창의체험학습 평균 프로그램 운영 수
		수원시 교육예산 보조	• 학생 1인당 교육예산 보조금액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구 중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 •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
		빈곤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수
		결식아동 비율	• 만 0~18세 인구 중 결식아동 비율
		사회복지예산	•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국민연금 납입자율	• 국민연금 대상자 수 대비 납입자 수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 만 0~5세 인구 100명당 보육시설 수 • 직장 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수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도	• 휴가, 휴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설문) • 휴가, 휴직 이용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설문)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GRDP	• 전체 시민 수 대비 지역 내 총생산
			도시 성장률	• 작년 대비 경제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증감
			직업훈련교육	• 직업훈련교육 예산 및 프로그램 수 • 직업훈련교육 만족도(설문)
			고용안정성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 수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발생 건수
			체불임금 발생 및 구제 건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체불임금 피해자 수 • 전체 체불임금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노동조합 조직률	• 대상 사업자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자 수
			산업재해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산업재해 발생건수
			여성의 노동조건	•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남성과 비교) •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남성과 비교) • 여성의 평균임금(남성과 비교)
사회적 경제의 성장률	• 사회적 경제 조직별 성장률 • 사회적 경제 조직별 매출액			
3. 시민 권리주체로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시민의 행정 참여도	• 시 위원회 전체 위원회 수 대비 시민위원 수 • 시 행정에 시민참여 만족도(설문)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동안 관련 조례 및 제도의 도입 건수
		시장의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및 소통 빈도수 • 시장의 대화 및 소통에 관한 시민 만족도(설문)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포용 및 관용도(설문)
		외국인의 차별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거주 외국인 중 차별정도 및 경험의 인식정도(설문)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거주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설문)
		외국인 언어 소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중 다국어가 표기된 시설 수 • 공공시설 중 언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 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설문)
		사회적 소통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통의 정도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설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신고건수 대비 허가 건수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설문)
		표현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언론, 출판, 사이버, 집회)의 자유(설문)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 횟수 및 이수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횟수 • 시민 대상 성인지 감수성 이수자 수
	자원봉사 등록률 및 활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등록 인구 중 실제 활동인구 비율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평균 자원봉사 횟수 •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헌혈봉사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수 대비 헌혈 실적(참여자 수) 	
	사회복지 기부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수 대비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부 참여자 수 	
	시민사회단체의 조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단체의 수(인구 만명당)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전체 위원 수 대비 여성위원 비율
		다문화 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 전체 다문화 가족 중 지원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 수
		투표율	• 선거별 투표율(부정기)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4-1. 인권정책 역량 강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 1년 동안 인권영향평가 건수
		성 평등 실현	• 1년 동안 성별영향평가 건수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실질적 인권신장 제도 도입	• 1년 동안 인권 실태조사 건수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지원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건수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액수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건수	• 국내 민·관 기관과의 인권협약 체결 건수
		인권행정에 대한 만족도	• 시의 인권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설문)

2 • 인권지표 선정을 위한 담당(관련)부서 의견조사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대상으로 수원기본통계, 수원시 사회조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측정되고 있는 지표 외 신규지표 98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인권지표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83개의 인권지표와 위 세 가지 조사인 수원기본통계, 수원시 사회조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된 지표를 포함한 136개의 인권지표를 추출하였다.

담당(관련)부서 대상으로 136개의 인권지표에 대한 인권지표명, 측정방법, 지표 생산 출처, 그리고 매년 측정(생산 혹은 보유) 가능 여부 등을 의견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의견서는 앞선 인권지표 선정을 위한 신규지표 전문가 조사와 동일하게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 9개 중점사업을 토대로 인권지표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문항을 담당(관련)부서별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 수원시 인권지표 의견서 분석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 가정폭력 신고 및 처벌 건수 	지
		성폭력 발생 및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수 대비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건수 성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 성폭력 신고 및 처벌 건수 	지
		대기오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대기오염물질 평균농도(대기환경측정망 측정값) 	수
		하천 및 호소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점오염저감 시설 수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
		소음공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준치 대비 소음공해 정도 	수
		환경오염물질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쓰레기 배출량 	수
		수원형 1회용품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품 점검 업소 수 	지
		1인당 공원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공원 면적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생활녹지 면적 	지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체감도 살고 있는 지역 만족도 	사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기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수
범죄발생 및 검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범죄 발생 건수 	지		
교통안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수 지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의무 설치 인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소화기 또는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 주택 소방시설 의무 설치 인지율 	사
		시민 사생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의 사생활보호 만족도(설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지수 	
		학교폭력 발생 및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천 명당 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피해자 수 대비 구제건수 	
		장애인 학대 및 폭력 발생 및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천 명당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신고 및 상담 수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보행자 사망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천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 전체 택시 중 전용택시 비율(1·2급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전용택시 수)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향신호기 설치율 점자보도블럭 설치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BF 인증 시설 수 	
		도시 이동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의 도시 이동환경에 대한 만족도(설문) 	
		치안 안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범죄 검거율 	
		CCTV 설치 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 설치 대수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소방인력 충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인력 수요 대비 소방인력 수 	
		유통식품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합 식품의 검사율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공임대주택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수 대비 입주자의 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주택 중 최저기준에 미달한 주택 수 	
		1인당 평균 주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수 대비 주택 연면적의 총합 	
		주거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방수상태, 난방상태, 환기상태 등)의 만족도 	
		주거환경 최저수준 미달 주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주택 수 대비 최저기준 미달 주택 수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개발/재건축지구 주택 수 	
		노숙자 인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만 명당 노숙자의 수 	
		도시개발에 의한 이주자 주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 가구수 대비 주거 확보 가구 수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천 명당 문화 공간(공연시설, 전시실 등) 수 	수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사
		여가활동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설문)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설문) 	사
		도서관 이용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5천 명당 공공도서관 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예산 대비 도서관 예산액 	지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성평등 교육 이수자 수	• 5급 이상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수 대비 성인지 교육 이수자 수	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인 공연 지원 횟수	지
			•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지
			• 문화예술단체 지원 건수 및 총액	지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지
		동호회 활동	• 전체 시민 중 동호회 활동하는 시민 비율	
			• 생활문화 동호회 수	지
		평생학습 참여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지
		여가활동 시간	• 시민 1인당 주당 여가활동 시간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취약계층 인구 중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시민인권의식	• 시민의 민주, 인권, 봉사, 배려 의식 정도(설문)			
2. 시민 맞춤형 인권 보장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독거노인 비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독거노인 수	수
		보건 의료인력	• 시민 1인당 의료인력 수	수
		보건 의료시설	•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수 • 인구 천명당 병상 수	수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설문)	사
		자살 발생 수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지
		스트레스 인지도	•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설문)	사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대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수	PHIS(가 정보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치매선별검사율	지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이상 한 비율	지역사
		초·중·고,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 초·중·고·대안학교 공공급식 혜택 시민 수	지
		국민연금 납입액	•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수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 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	지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만 0~18세 인구 대비 센터 이용자 수	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 위기청소년 중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노인 취업률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대비 재가시설 급여 수혜자 수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 전체 보육시설 수 대비 특수보육 지정 수	보
		장애인 복지시설 수	• 전체 등록 장애인 천 명당 복지시설 수	
		장애인 특수/통합학교 설치율	• 전체 학교(대학 제외) 수 대비 설치 학교 수	
		장애인 특수/통합학교(학급) 설치율	•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수 대비 설치 학교 수	
		장애인 채용률	•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률 • 민간부문 장애인 채용률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 중증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시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 3급 이하 장애인 수 대비 직업재활시설 정원 수	
		장애인 평생학습(정보교육포함) 접근도	• 장애인 전용 평생학습운영 기관 수	
		일반여성 대비 장애여성 출산율	• 전체 출산율 대비 장애여성 출산율	
		5대 질환 사망자 수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법정감염병 감염자 수	•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	
		소아 예방접종률	• 만12세 이하 어린이 수 대비 접종자 수	예방접종률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율	• 대상자(취약계층) 수 대비 수검자 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율	• 전체 인구수 대비 1회 이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자 수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 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 스트레스	• 학업활동으로 인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초·중·고·대)(설문)	
		과중한 학습 스트레스	• 학습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설문)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	
		빈곤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수	
		결식아동 비율	• 만0~18세 인구 중 결식아동 비율	자녀
		사회복지예산	•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 만0~5세 인구 100명당 보육시설 수 • 직장 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수	보육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도	• 휴가, 휴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설문) • 휴가, 휴직 이용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설문)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 비 취업 여성 중 결혼,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비율	사
		소득수준	• 가구원 전체의 지난 1년간 총소득액의 한 달 평균 소득	사
			• 소득수준의 만족도 • 가구 월평균 소득	사
		소비생활	• 소비생활 만족도	사
		고용률	• 15~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	수 지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여성 인구 대비 여성 취업자 수	수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	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	지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지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수	• 사회적 경제 조직 수	지
		사회적 일자리 수	•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 수	지
		직업훈련교육	• 직업훈련교육 예산 및 프로그램 수 • 직업훈련교육 만족도(설문)	
		고용안정성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수원시 및 비
	비정규직 비율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 수	수원시 및 비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발생 건수	
		체불임금 발생 및 구제 건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체불임금 피해자 수 • 전체 체불임금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노동조합 조직률	• 대상 사업자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자 수	
		산업재해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산업재해 발생건수	
		여성의 노동조건	•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남성과 비교) •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남성과 비교) • 여성의 평균임금(남성과 비교)	수원시 및 비
3.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행정정보 공개율	•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지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 공공기관(행정포함) 시민만족도	지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지
		행정위원회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 참여	• 행정위원회 참여자 수 대비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 참여자 수	지
			• 거주 이주민 위원 수	지
		공동체 의식	• 공동체 의식	사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지원(설문)	사
		사회적 신뢰	• 일반인에 대한 신뢰감	사
시민의 행정 참여도	• 시 위원회 전체 위원회 수 대비 시민위원 수 • 시 행정에 시민참여 만족도(설문)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시장의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및 소통 빈도수 시장의 대화 및 소통에 관한 시민 만족도(설문)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의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포용 및 관용도(설문) 	
		외국인의 차별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거주 외국인 중 차별정도 및 경험의 인식정도(설문)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거주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설문) 	
		외국인 언어 소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중 다국어가 표기된 시설 수 공공시설 중 언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 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설문) 	
		사회적 소통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소통의 정도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설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회신고건수 대비 허가 건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설문) 	
		표현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언론, 출판, 사이버, 집회)의 자유(설문)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시 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위원회 여성 (부)위원장 비율 	지
		자원봉사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인구 수 중 자원봉사자 등록률 	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횟수 및 이수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횟수 시민 대상 성인지 감수성 이수자 수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평균 자원봉사 횟수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사회복지 기부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인구수 대비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부 참여자 수 	경기사 모금회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측정방법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시민사회단체의 조직률	• 시민사회단체의 수(인구 만명당)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전체 위원 수 대비 여성위원 비율		
		다문화 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 전체 다문화 가족 중 지원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 수		
		투표율	• 선거별 투표율(부정기)		
	4-1. 인권정책 역량 강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 1년 동안 인권영향평가 건수		
		성 평등 실현	• 1년 동안 성별영향평가 건수		성 평등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인권교육 참여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자 수		
			•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인권교육 이수자 수		
			• 인권교육 실시 초·중·고 비율		
			• 공무원, 공공기관 법정교육 중 인권교육 이수율		지
		• 인권교육 운영 횟수 및 참여자 수		지	
실질적 인권신장 제도 도입		• 1년 동안 인권 실태조사 건수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지원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건수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액수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건수	• 국내 민·관 기관과의 인권협약 체결 건수				
인권행정에 대한 만족도	• 시의 인권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설문)				

3 • 수원시 인권지표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에게 수원시 인권지표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후, 인권담당관의 협조 아래 인권지표 관련 담당(관련)부서에게 인권지표명, 측정방법, 출처 및 측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원시 인권지표를 선정하였다. 수원시 인권지표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맞추어 총 80개를 구성하였으며 전체 인권지표는 <표 4-3>과 같다.

표 4-3 |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사업별 인권지표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② 교통안전도	
		③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④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의무 설치 인지도	
		⑤ 화재안전취약계층 해소율	
		⑥ 범죄발생 및 검거율	
		⑦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⑧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⑨ CCTV 설치 대수	
		⑩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①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② 공공임대주택 비율	
		③ 1회용품 사용량	
		④ 소음공해도	
		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⑥ 하천 및 호소 수질오염도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①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② 도서관 이용환경	
		③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④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⑤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⑥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⑦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⑧ 동호회 활동 수	
		⑨ 여가활동 만족도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① 보건 의료시설 수
			② 보건 의료인력 수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④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⑤ 사회복지예산 비율			
⑥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⑦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⑧ 독거노인 비율			
⑨ 소아 예방접종률			
⑩ 결식아동 비율			
⑪ 초·중·고,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수			
⑫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정책목표	중점사업	인권지표
		⑬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⑭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건수 ⑮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⑯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⑰ 장애인 복지시설 수 ⑱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⑲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⑳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㉑ 스트레스 인지도 ㉒ 자살 발생 수
	2-2. 차별 없는 경제 활동	① 소득수준 ② 소비생활 ③ 국민연금 납입액 ④ 고용률 ⑤ 실업률 ⑥ 절대적 빈곤율 ⑦ 고용안정성 ⑧ 사회적 일자리 수 ⑨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수 ⑩ 직업훈련교육 지원 ⑪ 여성의 노동조건 ⑫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 ⑬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3.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① 공동체 의식 ② 사회적 관계망 ③ 사회적 신뢰 ④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⑤ 행정정보 공개율 ⑥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⑦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의 행정위원회 참여율 ⑧ 시장의 리더십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① 자원봉사 참여율 ②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③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④ 시 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 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4-1. 인권정책 역량강화	① 인권영향평가 건수 ② 성별영향평가 건수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① 인권교육 참여율 ② 성평등 교육 이수자 수 ③ 인권 실태조사 건수 ④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⑤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 건수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1) 중점사업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의 인권지표

첫 번째 정책목표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의 첫 번째 중점사업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05.24.). 이러한 정의에 따라 수원시 인권지표는 수원이라는 지역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험이 통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도시 내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각종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실제로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였다.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과 관련한 인권지표는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 교통안전도, ▲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의무 설치 인지율, ▲ 화재안전취약계층 해소율, ▲ 범죄발생 및 검거율, ▲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 CCTV 설치 대수, ▲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총 10가지이다. 인권지표 10가지에 따른 자세한 측정방법은 <표 4-4>와 같다.

표 4-4 | 중점사업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 • 전체 택시 중 전용택시 비율(1·2급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전용택시 수)
교통안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기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의무 설치 인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소화기 또는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 • 주택 소방시설 의무 설치 인지율
화재안전취약계층 해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
범죄발생 및 검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 발생 건수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 • 가정폭력 신고 및 처벌 건수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 • 성폭력 신고 및 처벌 건수
CCTV 설치 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 대수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체감도 • 살고 있는 지역 만족도

(2) 중점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인권지표

정책목표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의 두 번째 중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는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지, 근처 환경의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지, 외부의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권지표는 크게 환경 보호 정도, 근린생활시설 크기, 주거 취약계층 보호로 나뉜다.

중점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인권지표는 ▲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공공임대주택 비율, ▲ 1회용품 사용량, ▲ 소음공해도,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도 총 6가지로 구성하였다. 인권지표 6가지의 측정방법은 <표 4-5>와 같다.

표 4-5 | 중점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공공임대주택 비율	• 공공임대주택 비율
1회용품 사용량	• 1회용품 사용량
소음공해도	• 소음공해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도	•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도

(3) 중점사업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의 인권지표

정책목표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의 세 번째 중점사업은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이다.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에는 수원 시민들이 얼마나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수원시 인권지표는 사회적 약자 또한 이러한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활동이나 소득 보장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점사업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의 인권지표는 ▲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 도서관 이용환경, ▲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 동호회 활동 수, ▲ 여가활동 만족도 총 9가지이다. 9가지 인권지표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4-6>과 같다.

표 4-6 | 중점사업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 인구 천 명당 문화 공간(공연시설, 전시실 등) 수
도서관 이용환경	• 인구 5천 명당 공공도서관 수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 1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인 공연 지원 횟수 •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취약계층 인구 중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동호회 활동 수	• 생활문화 동호회 수
여가활동 만족도	•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설문)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설문)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1) 중점 사업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의 인권지표

두 번째 정책목표 '시민 맞춤 인권 보장'의 첫 번째 중점사업은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고,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돌봄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는 크게 보건 의료시설 인프라 및 관련 예산 정도,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맞춤형 돌봄 체계,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정신 건강 관련 수치를 살펴본다.

중점사업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의 인권지표는 ▲ 보건 의료시설 수, ▲ 보건 의료인력 수,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 사회복지예산 비율, ▲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독거노인 비율, ▲ 소아 예방접종률, ▲ 결식아동 비율, ▲ 초·중·고,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수, ▲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건수, ▲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 장애인 복지시설 수,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 스트레스 인지도, ▲ 자살 발생 수로 총 22가지이다. 인권지표에 따른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4-7>과 같다.

표 4-7 | 중점사업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보건 의료시설 수	•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수 • 인구 천명당 병상 수
보건 의료인력 수	• 시민 1인당 의료인력 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대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수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설문)
사회복지예산 비율	•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노인 요양료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대비 재가시설 급여 수혜자 수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치매선별검사율
독거노인 비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독거노인 수
소아 예방접종률	• 만12세 이하 어린이 수 대비 접종자 수
결식아동 비율	• 만0~18세 인구 중 결식아동 비율
초·중·고,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수	• 초·중·고·대안학교 공공급식 혜택 시민 수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만0~18세 인구 대비 센터 이용자 수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 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건수	• 위기청소년 1인당 서비스 건수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 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 전체 보육시설 수 대비 특수보육 지정 수
장애인 복지시설 수	• 전체 등록 장애인 천 명당 복지시설 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 3급 이하 장애인 수 대비 직업재활시설 정원 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 중증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시간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이상 한 비율
스트레스 인지도	•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설문)
자살 발생 수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2) 중점사업 ‘차별 없는 경제활동’의 인권지표

정책목표 ‘시민 맞춤 인권 보장’의 두 번째 중점사업은 ‘차별 없는 경제활동’이다.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노동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증진할 수도 있다. 차별 없는 경제활동에서는 크게 전반적인 수원시민의 경제활동 수준, 노동 취약계층(비정규직)의 노동권 보호 정도, 젠더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동의 성별 차이를 검토한다.

중점사업 ‘차별 없는 경제활동’의 구체적인 인권지표는 ▲ 소득수준, ▲ 소비생활, ▲ 국민연금

납입액, ▲ 고용률, ▲ 실업률, ▲ 절대적 빈곤율, ▲ 고용안정성, ▲ 사회적 일자리 수,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수, ▲ 직업훈련교육 지원, ▲ 여성의 노동조건, ▲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 ▲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로 총 14가지이다. 14가지 인권지표의 측정방법은 <표 4-8>과 같다.

표 4-8 | 중점사업 ‘차별 없는 경제활동’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의 만족도 • 가구 월평균 소득
소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생활 만족도
국민연금 납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
절대적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수 대비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수
고용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사회적 일자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 수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조직 수
직업훈련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교육 예산 및 프로그램 수 • 직업훈련교육 만족도(설문)
여성의 노동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남성과 비교) •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남성과 비교) • 여성의 평균임금(남성과 비교)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여성 인구 대비 여성 취업자 수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취업 여성 중 결혼,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비율

3)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1) 중점사업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의 인권지표

세 번째 정책목표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의 첫 번째 중점사업은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다. 정책과 관련하여 거버넌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학계·실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이러한 민-관 협력 체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공공기관의 행정 현황, 시 행정의 시민 참여 보장 정도를 파악한다.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의 인권지표는 ▲ 공동체 의식, ▲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신뢰, ▲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 행정정보 공개율, ▲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의 행정위원회 참여율, ▲ 시장의 리더십으로 총 8가지이다. 인권지표 8개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4-9>와 같다.

표 4-9 | 중점사업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공동체 의식	• 공동체 의식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지원(설문)
사회적 신뢰	• 일반인에 대한 신뢰감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 공공기관(행정포함) 시민만족도
행정정보 공개율	•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의 행정위원회 참여율	• 행정위원회 참여자 수 대비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 참여자 수
시장의 리더십	•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및 소통 빈도수

(2) 중점사업 ‘함께하는 사회참여’의 인권지표

정책목표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의 두 번째 중점사업은 ‘함께하는 사회참여’이다. 사회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 환경,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피력하고, 개인 및 조직의 형태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시민 간의 유대감 형성이나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된다. ‘함께하는 사회참여’에서는 크게 시민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정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측정으로 나뉜다.

중점사업 ‘함께하는 사회참여’의 인권지표는 ▲ 자원봉사 참여율, ▲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시 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로 총 5개이다. 인권지표에 따른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 중점사업 ‘함께하는 사회참여’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자원봉사 참여율	• 전체 인구 수 중 자원봉사자 등록률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전체 위원 수 대비 여성위원 비율
시 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	• 행정위원회 여성(부)위원장 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 중점사업 ‘인권정책 역량 강화’의 인권지표

네 번째 정책목표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첫 번째 중점사업은 ‘인권정책 역량 강화’이다. 인권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추진 정도를 살펴보고 이후 인권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단위에서 인권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국가 수준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없는 지역 인권정책의 수립부터 실행 과정까지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인권정책 역량 강화’의 지표는 인권 및 성별 영향평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중점사업 ‘인권정책 역량 강화’의 인권지표는 ▲ 인권영향평가 건수, ▲ 성별영향평가 건수로 총 2개이다. 인권지표에 따른 측정방법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 중점사업 ‘인권정책 역량 강화’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인권영향평가 건수	• 1년 동안 인권영향평가 건수
성별영향평가 건수	• 1년 동안 성별영향평가 건수

(2) 중점사업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의 인권지표

정책목표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두 번째 중점사업은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이다. 인권체계를 갖추는 것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지방정부 단위에서 인권체계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외에도, 시민사회나 실무 담당자와 협력해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에서는 인권 및 성평등 교육 정도, 협약이나 활동지원 등을 통한 제도 마련 정도를 검토한다.

중점사업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의 인권지표는 ▲ 인권교육 참여율, ▲ 성평등 교육 이수자 수, ▲ 인권 실태조사 건수,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 건수로 총 5개이다. 인권지표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 중점사업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에 따른 인권지표 및 측정방법

인권지표	측정방법
인권교육 참여율	• 공무원, 공공기관 법정교육 중 인권교육 이수율
성평등 교육 이수자 수	• 5급 이상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수 대비 성인지 교육 이수자 수
인권 실태조사 건수	• 1년 동안 인권 실태조사 건수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건수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예산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 건수	• 국내 민·관 기관과의 인권협약 체결 건수

제3절 IPA 분석 및 국가인권지표와 비교 분석

국가인권지표와 수원시 인권지표를 서로 비교 분석해 보면, 두 지표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수원시 인권지표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의 특성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는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는 중점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9개의 중점사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셋째,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는 4대 정책목표와 9개 중점사업에 따라 총 80개의 인권지표를 선정하되, 지표 개수를 각각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넷째,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는 측정방법을 추가함으로써 모든 수치가 측정 가능한 정량적 지표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기로 한다.

1 • 수원시 인권지표를 위한 IPA 분석

1) IPA 분석기법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만족도 분석) 기법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과 이용 후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경영자나 운영자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IPA의 필요성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 전략 수립에 유용하다. 소비자 인식에 기반하여 우선 개선해야 할 요소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복잡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평가 속성에 따른 평균값과 매트릭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실무 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하다(김경자, 2019). 셋째, 객관적

공감대 형성에 유용하다. 다른 분석기법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IPA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우선 중요도와 만족도 측정으로 소비자로부터 각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설문 등을 통해 수집한다. 다음으로 평균값 산출로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또한 2차원 매트릭스 구성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2차원 도표를 작성하고, 사분면 분포 분석으로 도표를 사분면으로 나누어 속성들을 배치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IPA 매트릭스는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사분면으로 나뉜다. 즉, 집중 유지(Keep up the good work) 영역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이 속성들은 현재 잘 관리되고 있으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 우선 개선(Concentrate here) 영역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이 영역의 속성들은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 과잉 노력(Overkill) 영역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이 속성들은 현재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저우선 순위(Low priority) 영역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이 속성들은 자원 투입을 줄여도 무방하다.

IPA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마케팅(특정 회사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분석), 사회복지(복지 서비스의 만족도 평가), 정책학 및 행정학(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 등에 활용된다(김필두 외, 2014; 최영출 외, 2014; 김경대 외, 2015). 또한 Martilla & James(1977)의 연구에서는 자동차 딜러십 서비스의 여러 속성에 대해 고객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했고, 이는 IPA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김경자, 2019).

IPA 기법은 소비자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전략 수립을 돕는 유용한 도구로 간단한 절차와 명확한 결과 도출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IPA는 경영자와 실무자에게 매우 실용적인 분석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로 IPA 기법을 적용하면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4-2 | IPA Matrix



자료: Maritilla, John. A.(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Develop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를 토대로 재구성

위 <그림 4-2>의 내용을 살펴보면, I 사분면(유지-keep up the good work)은 고객으로부터 중요도 및 만족도가 모두 높은 분야로, 기업은 이 선택속성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별화된 경쟁을 지속해야 한다(임재호, 2014; 최훈호, 2019).

II사분면(과잉-possible overkill)은 중요도는 높지 않으나 만족도가 높은 부분으로, 소비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 자원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노력은 지양되어야 한다(임재호, 2014; 전영록, 2016; 최훈호, 2019).

III사분면(저순위-low priority)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분야로, 추가적인 자원 배분에서 우선순위가 낮다. 이 부분은 추가 자원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며, 자원 투입을 제한해야 한다.

IV사분면(집중-concentrate here)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부분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서비스나 제품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조직이나 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임재호, 2014; 김경자, 2019; 최훈호, 2019).

이와 같은 중요속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특정 기업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할 분야, 그리고 과잉투자 되는 분야들을 식별할 수 있다(최동희, 201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한다면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IPA 기법은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며,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원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 IPA 분석을 위한 설문지 구성 및 내용

IPA 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체계도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인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는 4개의 정책목표와 9개의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중점사업에 따른 인권지표들을 전문가에게 질문하여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인권지표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지표들이므로 IPA의 기본인 중요도는 조사하였으나 만족도는 시행되지 않은 신규 인권지표들로 인해 수원시의 인권지표로서 적실한지에 대한 적실성으로 바꾸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설문지 예시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중점사업의 인권지표 설문지(예시)

낮음←중요성→높음					인권지표	낮음←적실성→높음				
①	②	③	④	⑤	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교통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의무 설치 인지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화재안전취약계층 해소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발생 및 검거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CCTV 설치 대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우선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이후 각 중점사업 즉, 1-1에서 4-2의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IPA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중점사업에 대한 세부 인권지표 즉, 중점사업 1-1 10개 지표, 중점사업 1-2 6개 지표, 중점사업 1-3 9개 지표, 중점사업 2-1 22개 지표, 중점사업 2-2 14개 지표, 중점사업 3-1 8개 지표, 중점사업 3-2 5개 지표, 중점사업 4-1 2개 지표, 중점사업 4-2 5개 지표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설문지는 중요성 5점 척도, 적실성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인권분야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24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전문가로 조사로 전체 설문지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중점사업별 인권지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인권지표의 내용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3)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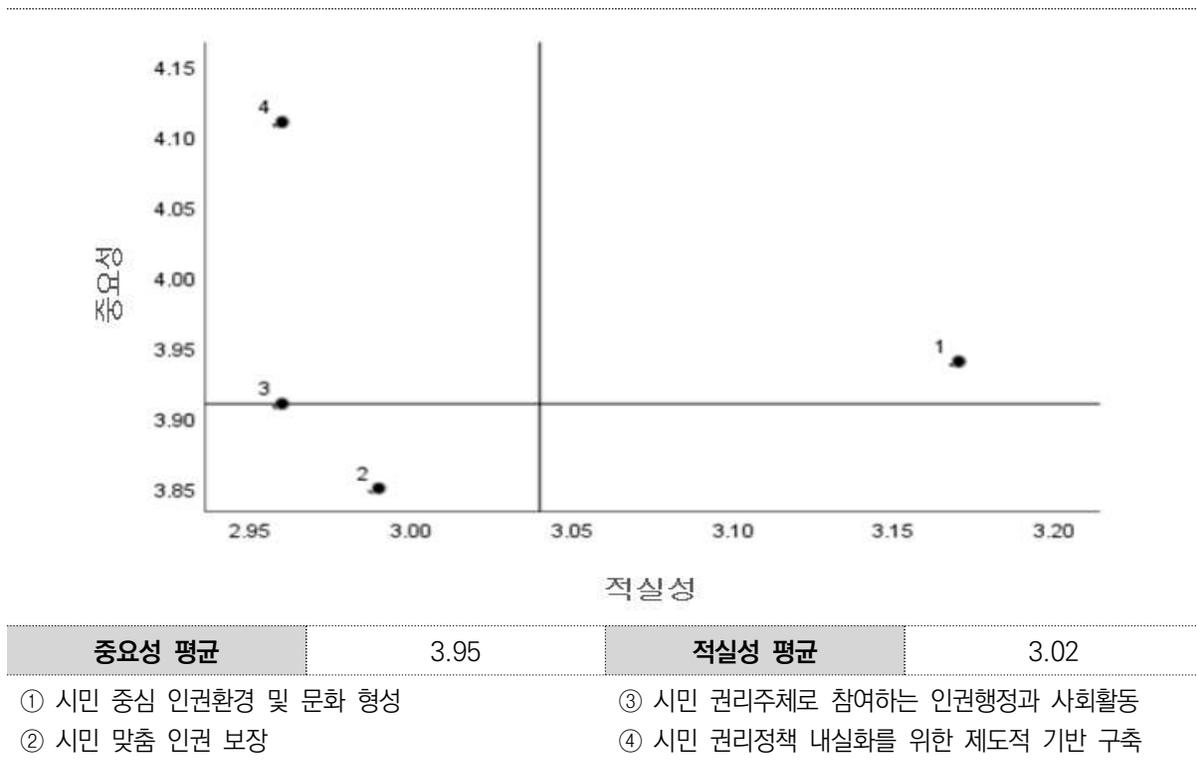
전체 정책목표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3>과 같다.

정책목표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3.95점으로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3.02점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지표로서의 적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①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으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③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④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② 시민 맞춤 인권 보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정책목표는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시민 맞춤 인권 보장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정책목표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3 | 정책목표 전체 IP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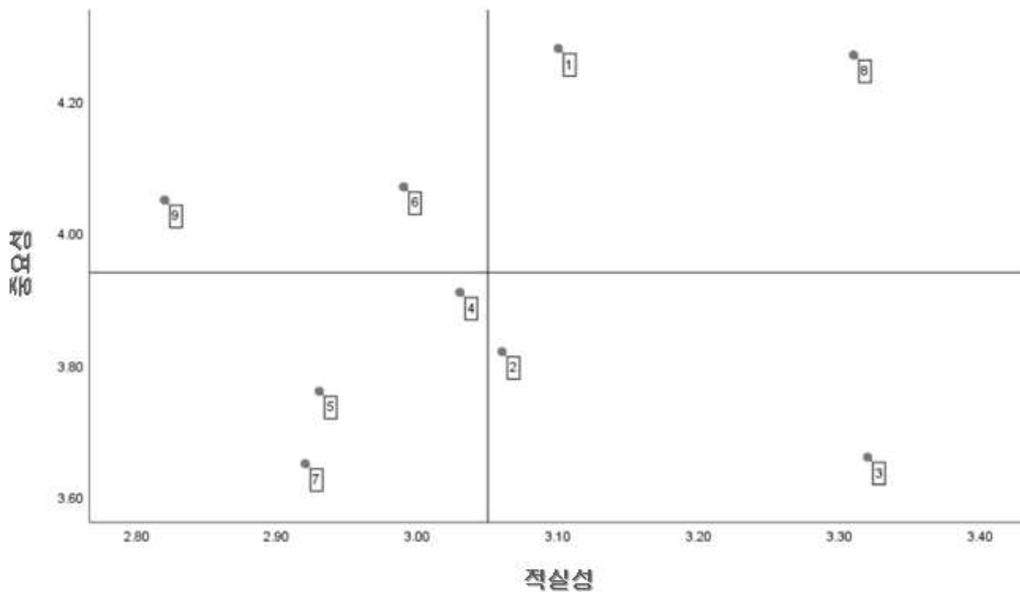
전체 중점사업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4>와 같다.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3.94점으로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3.05점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지표로서의 적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⑧ 인권정책 역량강화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⑥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⑨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로 나타났다. 또한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④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⑤ 차별 없는 경제 활동, ⑦ 함께하는 사회참여로 나타났으며, 집중영역은 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③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중점사업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과 인권정책 역량강화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차별 없는 경제 활동, 함께하는 사회참여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향후 중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4 | 중점사업 전체 IPA 분석



중요성 평균	3.94	적실성 평균	3.05
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⑤ 차별 없는 경제 활동	
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⑥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③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⑦ 함께하는 사회참여	
④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⑧ 인권정책 역량강화	
		⑨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전체 중점사업 중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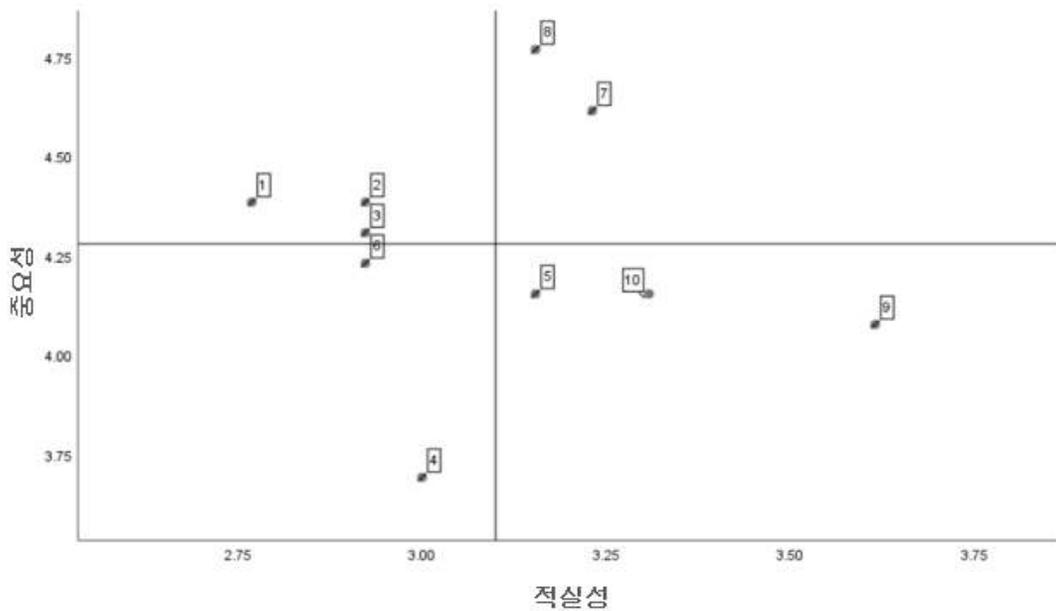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4.2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3.10점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지표로서의 적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⑦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⑧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② 교통안전도, ③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로 나타났다. 또한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⑤ 화재안전취약계층 해소율, ⑨ CCTV 설치 대수, ⑩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집중영역은 ④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의무 설치 인지율, ⑥ 범죄발생 및 검거율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안전한 지역환경 구성에 있어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화재안전 취약계층 해소율, CCTV 설치 대수,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향후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5 |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 IPA 분석



중요성 평균	4.28	적실성 평균	3.10
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⑥ 범죄발생 및 검거율	
② 교통안전도		⑦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③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⑧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④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의무 설치 인지율		⑨ CCTV 설치 대수	
⑤ 화재안전취약계층 해소율		⑩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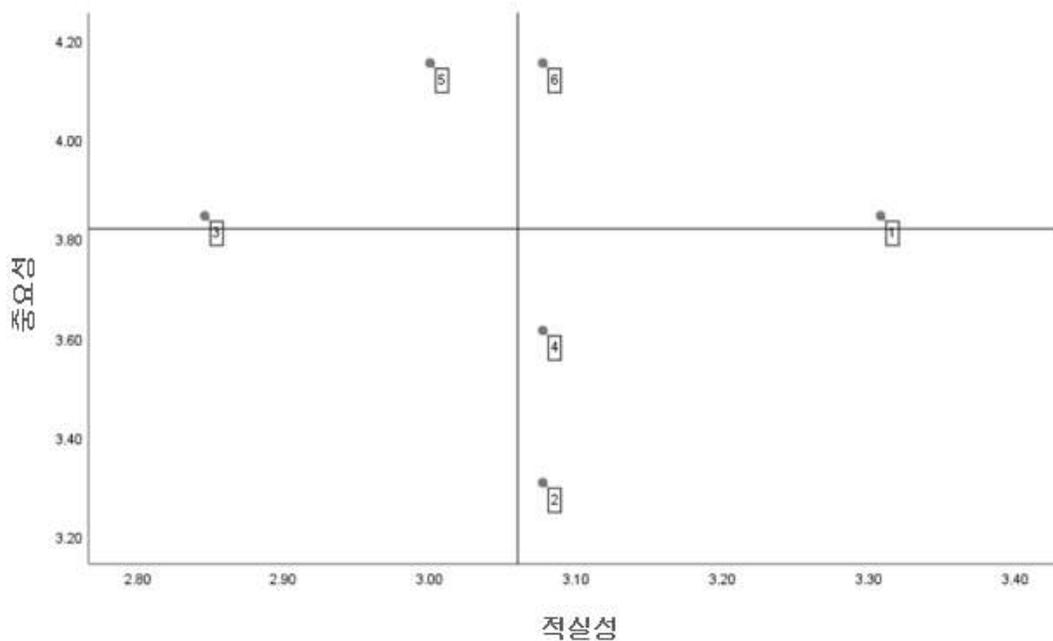
전체 중점사업 중 1-2 쾌적한 주거환경 구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6>과 같다.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3.8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3.06점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지표로서의 적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①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⑥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도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③ 1회용품 사용량, 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나타났다. 저순위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중영역은 ② 공공임대주택 비율, ④ 소음공해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도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높은 적실성에 비해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는 1회용품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경우 향후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6 |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권지표 IPA 분석



중요성 평균	3.82	적실성 평균	3.06
①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④ 소음공해도	
② 공공임대주택 비율		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③ 1회용품 사용량		⑥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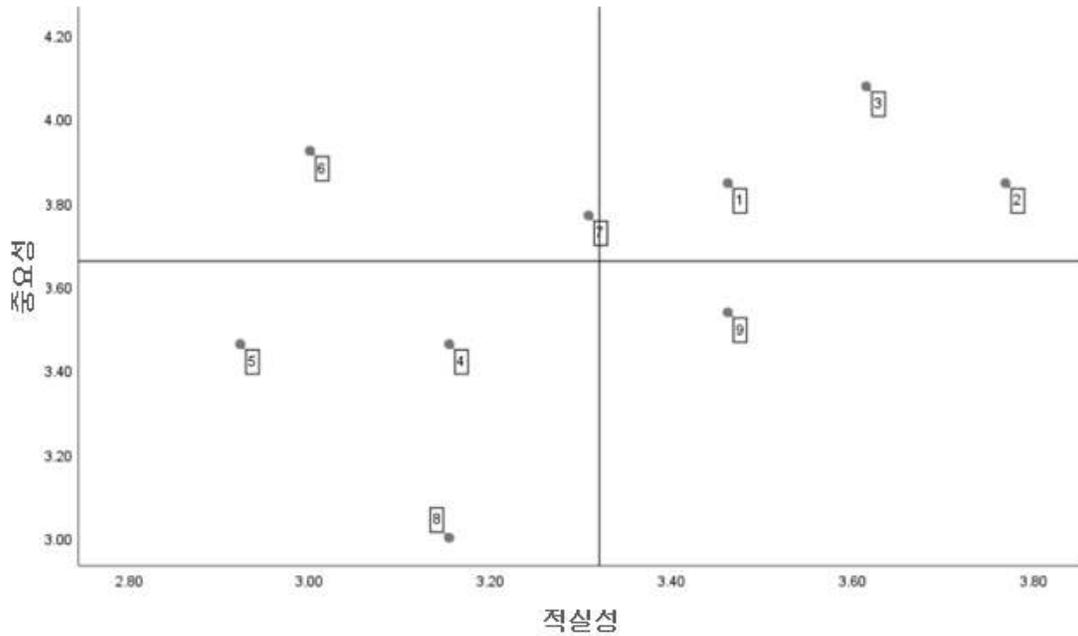
전체 중점사업 중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7>과 같다.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3.66점으로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3.32점으로 타 지표에 비해 적실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①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② 도서관 이용환경, ③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으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⑥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⑦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④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⑤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⑧ 동호회 활동 수로 나타났으며, 집중영역은 ⑨ 여가활동 만족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에 있어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도서관 이용환경, 공공 체육시설 이용환경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동호회 활동 수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향후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7 |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 IPA 분석



중요성 평균	3.66	적실성 평균	3.32
①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⑤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② 도서관 이용환경		⑥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③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⑦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④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⑧ 동호회 활동 수	
		⑨ 여가활동 만족도	

전체 중점사업 중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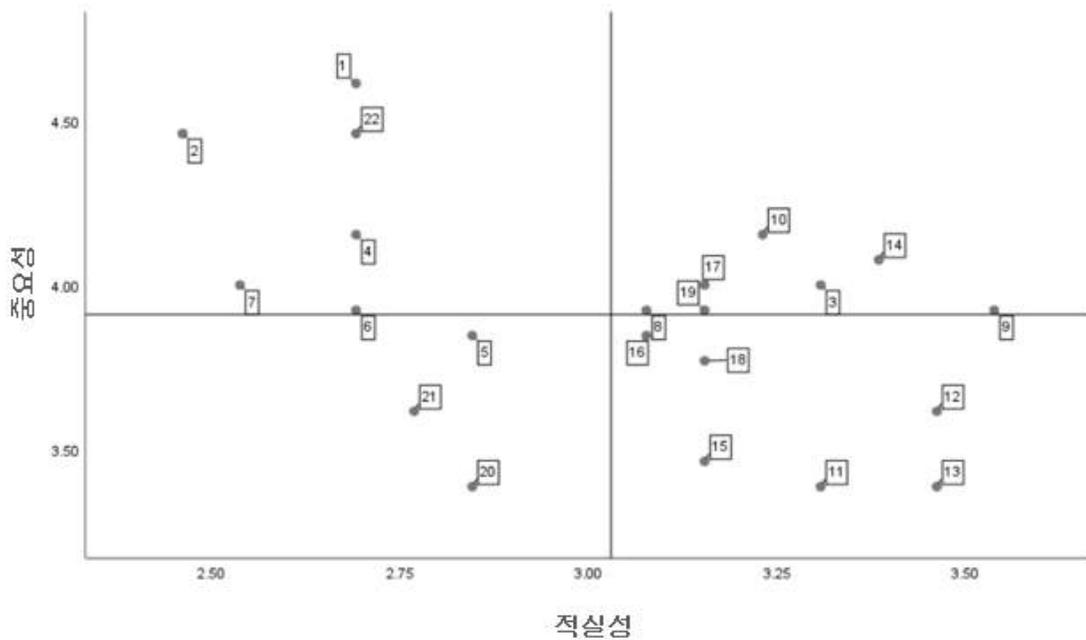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3.9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3.03점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지표로서의 적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⑧ 독거노인 비율, ⑨ 소아 예방접종률, ⑩ 결식아동 비율, ⑭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건수, ⑰ 장애인 복지시설 수, ⑲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① 보건 의료시설 수, ② 보건 의료인력 수, ④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⑥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⑦ 노인차매

조기검진 수검률, ② 자살 발생 수로 나타났다. 또한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⑤ 사회복지예산 비율, ⑳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㉑ 스트레스 인지도로 나타났으며, 집중영역은 ⑪ 초·중·고,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수, ⑫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⑬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⑮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⑯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⑱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에 있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독거노인 비율, 소아 예방접종률, 결식아동 비율,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건수, 장애인 복지시설 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예산 비율,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도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향후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8 |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 IPA 분석



중요성 평균	3.91	적실성 평균	3.03
① 보건 의료시설 수		⑫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② 보건 의료인력 수		⑬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⑭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건수	
④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⑮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⑤ 사회복지예산 비율		⑯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⑥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⑰ 장애인 복지시설 수	
⑦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⑱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⑧ 독거노인 비율		⑳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⑨ 소아 예방접종률		㉑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⑩ 결식아동 비율		㉒ 스트레스 인지도	
⑪ 초·중·고,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수		㉓ 자살 발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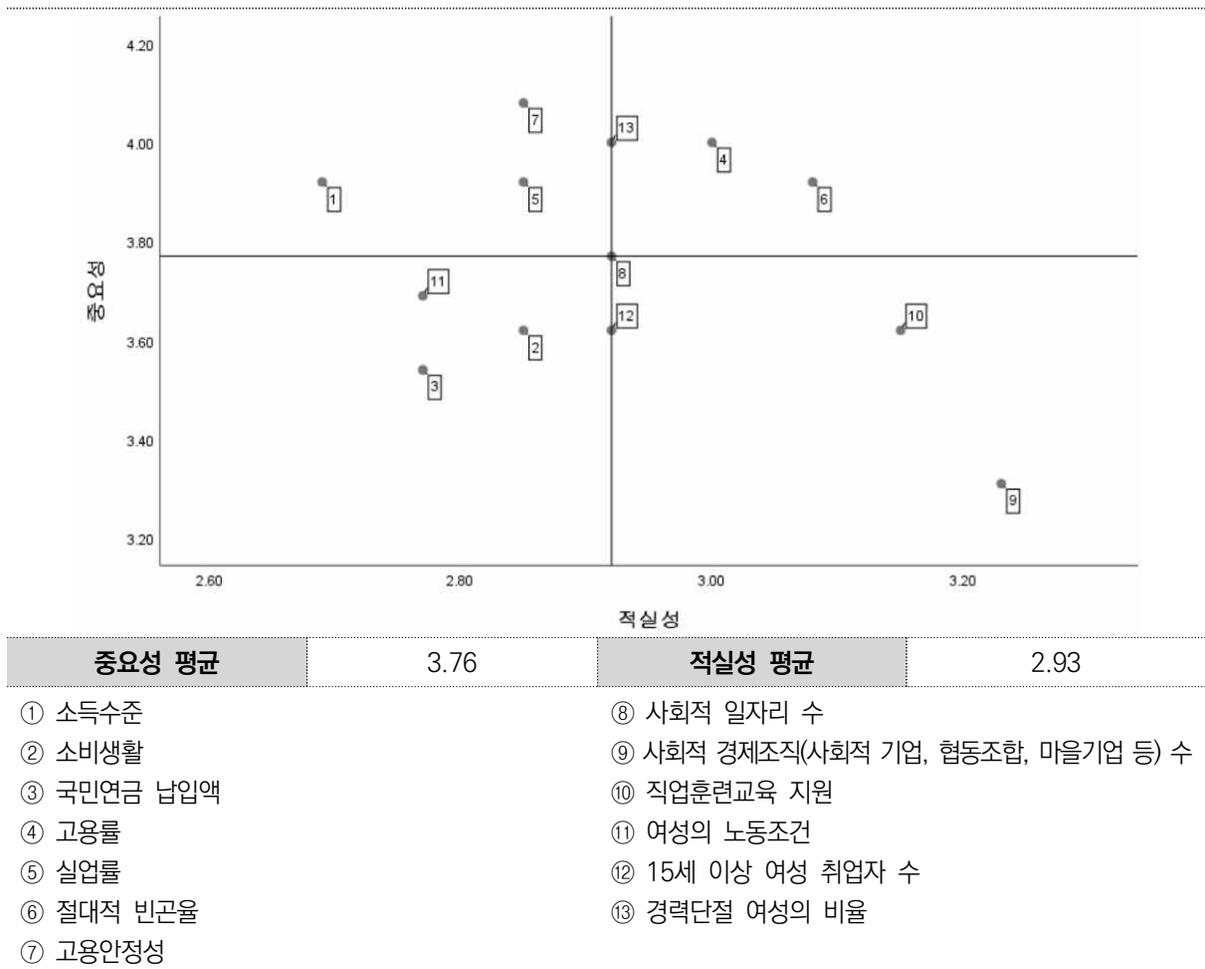
전체 중점사업 중 2-2 차별없는 경제활동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9>와 같다.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3.7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2.93점으로 타 지표에 비해 적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④ 고용률, ⑥ 절대적 빈곤율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① 소득수준, ⑤ 실업률, ⑦ 고용안정성, ⑬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② 소비생활, ③ 국민연금 납입액, ⑪ 여성의 노동조건, ⑫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로 나타났으며, 집중영역은 ⑧ 사회적 일자리 수, ⑨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수, ⑩ 직업훈련교육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차별없는 경제활동에 있어 고용률과 절대적 빈곤율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소비생활, 국민연금 납입액, 여성의 노동조건,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향후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9 | 2-2. 차별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 IP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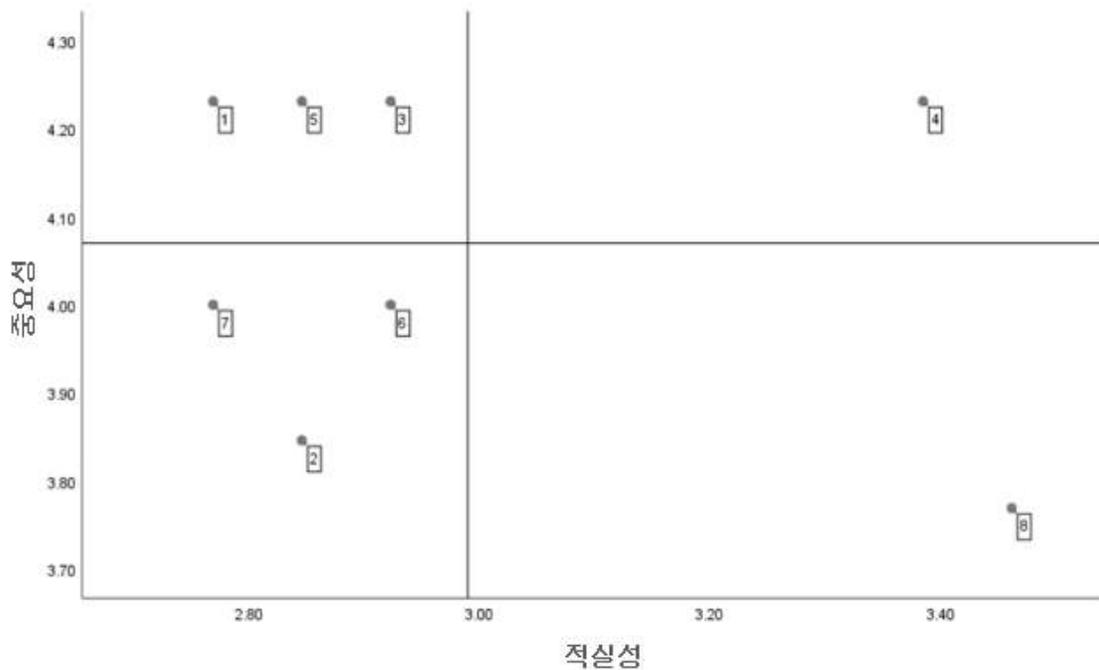
전체 중점사업 중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10>과 같다.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4.0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2.99점으로 타 지표에 비해 적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④ 공공기관 시민만족도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① 공동체 의식, ③ 사회적 신뢰, ⑤ 행정정보 공개율로 나타났다. 또한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② 사회적 관계망, ⑥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⑦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의 행정위원회 참여율로 나타났으며, 집중영역은 ⑧ 시장의 리더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공공기관 시민만족도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사회적 관계망,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의 행정위원회 참여율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향후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10 |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 IPA 분석



중요성 평균	4.07	적실성 평균	2.99
① 공동체 의식		⑤ 행정정보 공개율	
② 사회적 관계망		⑥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③ 사회적 신뢰		⑦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의 행정위원회 참여율	
④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⑧ 시장의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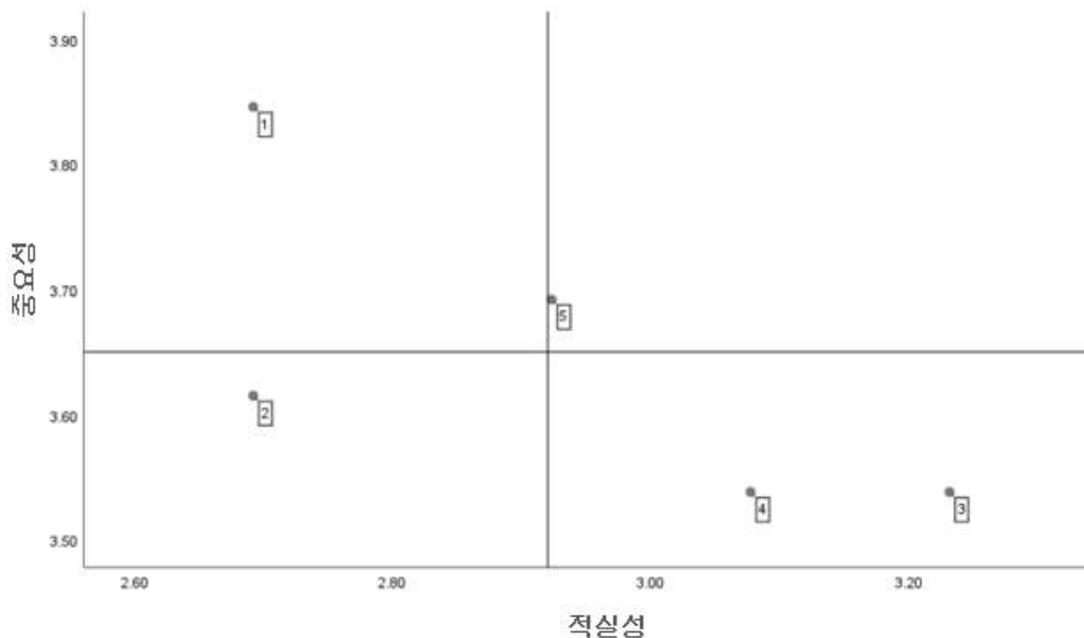
전체 중점사업 중 3-2 함께하는 사회참여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11>과 같다.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2.92점으로 타 지표에 비해 적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① 자원봉사 참여율로 나타났다. 또한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②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집중영역은 ③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④ 시 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함께하는 사회참여에 있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향후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11 |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인권지표 IPA 분석



중요성 평균	3.65	적실성 평균	2.92
① 자원봉사 참여율		③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②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④ 시 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	
		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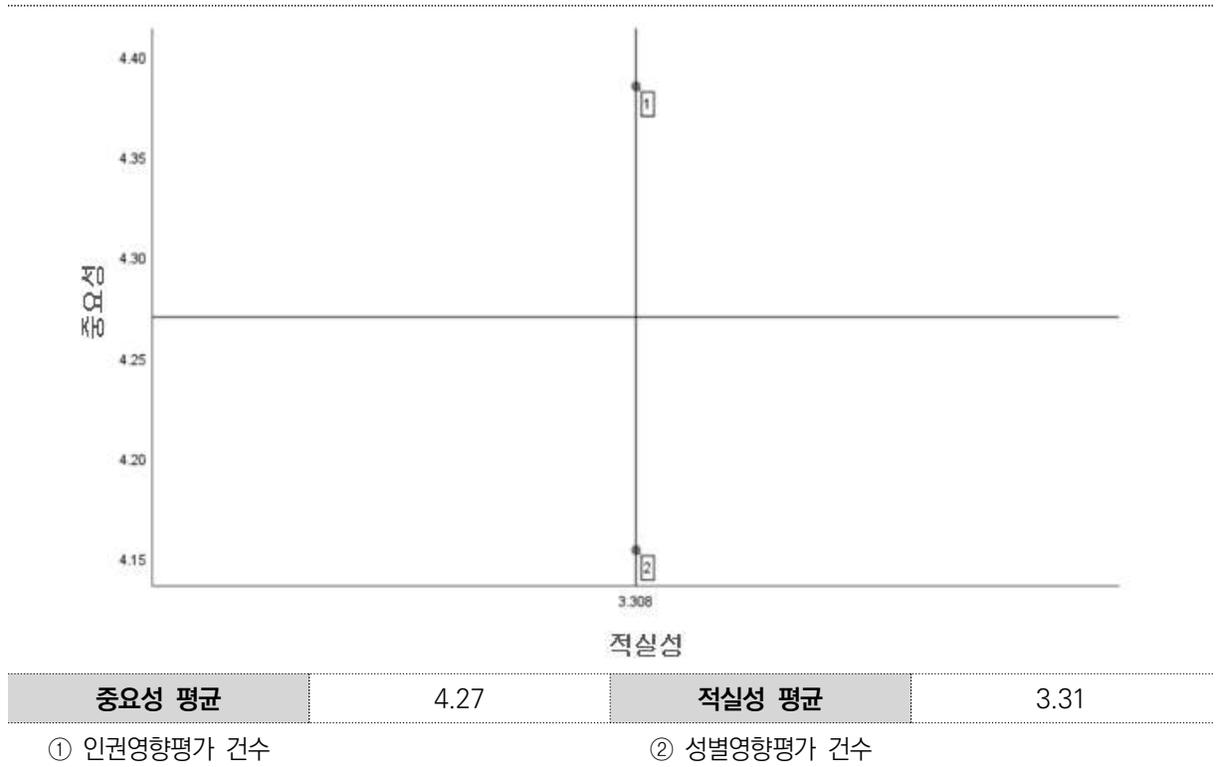
전체 중점사업 중 4-1 인권정책 역량강화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12>와 같다.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4.2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3.31점으로 타 지표에 비해 적실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① 인권영향평가 건수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과 집중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순위 영역의 경우 ② 성별영향평가 건수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함께하는 사회참여에 있어 인권영향평가 건수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성별영향평가 건수의 경우 중요도와 적실성이 모두 떨어져 향후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12 | 4-1. 인권정책 역량강화 인권지표 IP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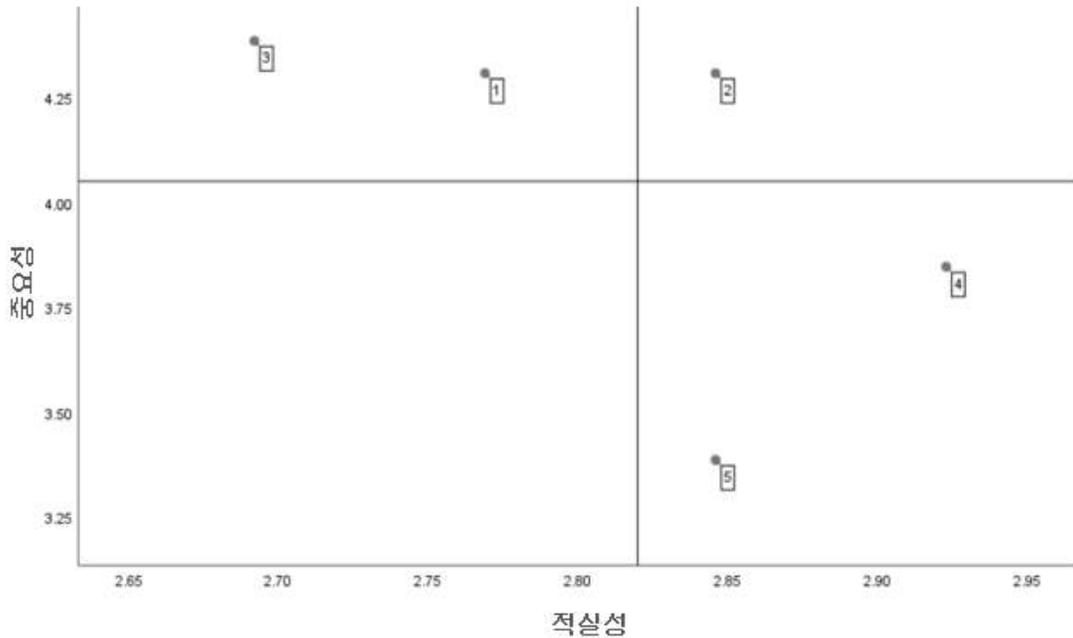
전체 중점사업 중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13>과 같다.

중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4.0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실성에 대한 평균은 2.82점으로 타 지표에 비해 적실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면 유지영역의 경우 ② 성평등 교육 이수자 수로 나타났으며, 과잉영역은 ① 인권교육 참여율, ③ 인권 실태조사 건수로 나타났다. 저순위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중영역은 ④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⑤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 건수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함께하는 사회참여에 있어 성평등 교육 이수자 수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권교육 참여율, 인권 실태조사 건수의 경우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4-13 |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인권지표 IPA 분석



중요성 평균	4.05	적실성 평균	2.82
① 인권교육 참여율		③ 인권 실태조사 건수	
② 성평등 교육 이수자 수		④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⑤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 건수	

2 • 국가인권지표와의 비교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표(이하 국가인권지표) 체계와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영역 구분의 기준부터가 다르다. 국가인권지표는 인간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3대 영역으로 대분류하여 1대 영역은 시민·정치적 권리, 2대 영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대 영역은 소수자 권리로 나뉜다. 이러한 영역 구분은 대체로 국제 표준과 다르지 않지만, 수원시 인권지표는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인권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지표 체계와 상당히 다르다.

수원시 인권지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구성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지표와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를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 4-14>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국가인권지표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1 구분 기준으로 삼아 인권지표 체계를 구성한 반면, 수원시 인권지표는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구성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정책목표에 기반하여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인권지표가 국가 인권

정책의 기본계획과 동시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인권적 이상적 차원에 충실한 반면, 수원시 인권지표는 제1, 2,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 10년 뒤에 마련됨에 따라 인권 현실적 차원을 반영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수원시의 지역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 4-14 | 국가인권지표와 수원시 인권지표 영역 비교

인권지표 유형	영역	
국가인권지표	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정치적 권리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소수자 권리
수원시 인권지표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 시민 맞춤 인권 보장 •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다음으로 국가인권지표와 수원시 인권지표의 세부 영역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인권지표는 인간의 기본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시민·정치적 권리는 ▲ 안전권, ▲ 적정절차의 권리, ▲ 자유권, ▲ 참정권, ▲ 평등권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 사회보장권, ▲ 노동권, ▲ 건강권, ▲ 주거권, ▲ 교육권으로, 소수자 권리는 ▲ 장애인, ▲ 여성, ▲ 아동, ▲ 노인, ▲ 난민·북한이탈주민으로 나뉜다.

반면에 수원시 인권지표는 정책목표에 따른 중점사업을 기준으로 삼아, 제1 정책목표인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을 ▲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으로, 제2 정책목표인 시민 맞춤 인권 보장을 ▲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 차별 없는 경제활동, 제3 정책목표인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을 ▲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 함께하는 사회참여로, 제4 정책목표인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 인권정책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로 각각 세분하였다. 국가인권지표와 수원시 인권지표 세부 영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4-15>와 같다.

국가인권지표는 세부 영역에서도 기본권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포괄적인 범주 차원에서 구성된 특성이 나타난다. 반면에 수원시 인권지표는 세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정책목표에 맞춰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중점사업을 기준으로 영역을 세분화한 특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국가인권지표는 기본권을 기준으로 삼아 여전히 인권 이상적인 차원이 범주화된 인상이 강한 반면, 수원시 인권지표는 중점사업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훨씬 더 인권 현실적인 차원에서 인권지표가 선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훨씬 더 실천적 차원에 기반한 인권지표를 선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4-15 | 국가인권지표와 수원시 인권지표 세부영역 비교

인권지표 유형	영역		세부 영역
국가 인권지표	기본권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권, 적정절차의 권리,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소수자 권리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난민·북한이탈주민
수원시 인권지표	정책목표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시민 맞춤 인권 보장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차별 없는 경제활동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함께하는 사회참여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인권정책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인권지표 개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수원시 인권지표는 총 80개이다.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한 인권지수의 개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16>과 같다.

첫째, 제2 정책목표 ‘시민 맞춤 인권 보장’에 35개의 인권지표가 최다 선정되어 있다. 이는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22개,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제1 정책목표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에 25개 인권지표가 선정되어 있다. 이는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10개,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6개,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9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셋째, 제3 정책목표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에 13개의 인권지표가 선정되어 있다. 이는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8개,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5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4 정책목표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모두 7개의 인권지표가 선정되어 있다. 이는 ‘4-1. 인권정책 역량 강화’ 2개,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5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수원시 인권지표의 개수 분포도를 통해서도 인권지표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에서 제2 정책목표 ‘시민 맞춤 인권 보장’에 선정된 인권지표의 개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수원시가 무엇보다도 인권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특성이 드러난다.

국가인권지표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특히 안전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주거권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국가인권지표와 수원시 인권지표는 체계상 선정 기준 및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각의 인권지표를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할 경우 두 인권지표 사이의 내용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4-16 | 최종 선정된 수원시 인권지표

(단위: 개)

정책목표	중점사업	지표 개수	합계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10	25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6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9	
시민 맞춤 인권 보장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22	35
	차별 없는 경제활동	13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8	13
	함께하는 사회참여	5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인권정책 역량 강화	2	7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5	

국가인권지표 체계상에서 나타난 인권지표의 분포도를 비교적 시각에서 제시해 보면 다음 <표 4-17>과 같다. 국가인권지표 체계는 인간의 기본권을 인권지표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로 인간이 활동하는 4대 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삼고, 거기에 시민적 권리와 소수자의 권리를 결합하여 전체 세 가지의 기본 권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에는 ▲ 안전권, ▲ 적정 절차의 권리, ▲ 자유권, ▲ 참정권, ▲ 평등권으로 5개의 세부적인 권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에서 6개의 세부 지표로 구분된 자유권의 인권지표가 39개로 가장 많이 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엔인권지표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지표도 인간의 자유권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영역에는 세부 지표가 면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지표 체계상에서 71개의 인권지표를 선정했는데, 세부 영역별 지표 개수만 보면 제일 많고, 노동권 영역의 지표 개수가 제일 많다.

셋째, 국가인권지표 체계에 소수자의 권리영역에 5개 범주를 포함시켰는데, 이 영역은 국가가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보장과 보호 등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세부 지표는 인권지표를 활용한 인권 조사 활동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게 진행될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지표 체계는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4-17 | 국가인권지표 분포도

(단위: 개)

영역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지표 개수	세부 영역 합	총합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권	생명권	3	15	65
	적정 절차의 권리	신체의 자유	12		
	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4	39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이동의 자유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5		
		의사 및 표현의 자유	10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3			
	참정권	참정권	10	10	
평등권	평등권	1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보장권	-	17	71	71
	노동권	-	27		
	건강권	-	10		
	주거권	-	14		
	교육권	-	3		
소수자 권리	장애인	이동권	3	24	93
		정보 접근권	4		
		주거권	2		
		노동권	3		
		교육권	4		
		건강권과 여성폭력	4		
		소비자권리	2		
		사회복지행정	2		
	여성	고용	3	14	
		성폭력·성매매·성희롱	9		
		대표성 제고	2		
	아동	교육	5	16	
		안전	4		
		건강	1		
		복지·보육	6		
	노인	소득	5	32	
		주거·교통	7		
노동		4			

영역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지표 개수	세부 영역 합	총합
		사회참여	5		
		건강	7		
		안전위협	2		
		노인 존중	2		
	난민·북한이탈주민	-	7	7	

자료: 김태홍 외(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 개발」을 토대로 재구성

수원시 인권지표를 국가 단위의 대표적인 국가인권지표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수원시 인권지표는 무엇보다도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보장과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인권지표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수원시 인권지표는 인간의 기본권이 아닌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기반한 인권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 이상의 실현이라는 추상적 이념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인권 현실에 맞춘 인권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수원시 인권지표는 최대한 많은 수의 지표를 선정하려는 무분별한 계획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측정가능한 인권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인권지표에 기반한 인권정책의 실효를 최대화하려 한다.

강현수(2014)는 인권 도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함수관계에 대해 정리했는데, “인권의 보편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똑같이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인권정책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시의 특수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인권 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보편적이지만, 인권 도시의 실행 방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수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각 도시가 주민의 더 많은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각기 독특한 시책을 개발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강현수, 2014).

이러한 내용은 수원시 인권지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함수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원시 인권지표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보편적이지만, 수원시 인권지표의 실행 방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수적이어야 한다.

제4절 소결

수원시 인권지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 인권지표는 ① 10년 동안 축적해 온 수원시의 인권 행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맞추었고, ② 수원시민들이 인권지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지표를 참고해서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형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③ 인권담당관과 소통하여 실제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검토하여 인권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위와 같은 방향성 아래 수원시 인권지표는 여섯 가지의 절차를 거쳐 완성되었다. 먼저 수원시 인권지표는 ① 국내·외 인권지표와 수원시 관련 지표(수원기본통계, 수원시 사회조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현황을 검토했고, ②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맞추어 유사한 지표들을 분류하고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인권지표 초안을 작성하였다. ③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에게 연구진이 선정한 인권지표 초안 98개 문항을 제시하여, 수원시 인권지표의 적합성 여부와 적절한 인권지표의 순서의 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98개 지표 중 적합하다고 나타난 83개의 항목으로 인권지표를 재정리하였으며, 수원시 관련 지표(수원기본통계, 수원시 사회조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하여 총 136개의 지표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④ 담당(관련)부서에게 추출된 인권지표를 전달하여 인권지표로서의 적합성과 각 인권지표의 실제 생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원시 인권지표 80개를 확정하였다. ⑤ 전문가 및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확정된 인권지표에 대한 IPA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⑥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권지표의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인권지표는 ① 관련 부서와 전문가 대상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의 중요도와 적실성을 평가 및 조정하고, ② 온라인 설문조사, 공개 토론회, 워크숍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③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따라 구성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받아 지표를 개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④ 중요도 및 적실성에 따라 자원 분배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⑤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정과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지표와 수원시 인권지표를 비교했을 때, 두 인권지표 모두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기본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지표와 달리 수원시 인권지표는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지표를 설정하기보다 측정 가능한 지표만 선정했다는 점에서 인권정책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0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원시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의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생기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24년 수원시는 인권행정 10년을 맞이하여 인권정책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권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인권지표는 추상적인 인권 개념을 평가할 수 있게 수치화해주며, 지역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인권지표를 검토한 결과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시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인권지표를 참고하면서 2024년 현재 상황에 맞게 인권지표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표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실제 측정 가능한 항목들로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 인권지표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첫째, 수원의 10년 인권행정 자료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맞추어 수원시 인권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수원시민이 인권지표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특성을 살린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인권지표 외에도 수원시 관련 지표(수원기본통계, 수원시 사회조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도 함께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담당관과 협력하여 시의 모든 부서에 인권지표 초안을 전달하였으며, 실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위주로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내·외 인권지표의 사례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권지표 초안을 작성하였다. 수원시 인권지표의 기반이 되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에 맞추어 국내 사례 중 유사한 인권지표들을 분류하였으며, 추출된 인권지표 초안은 총 98개이다.

둘째, 인권지표 초안에 대해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회의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1명의 전문가 및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에게 인권지표로 적합성을 물어보았다. 추가적으로 작성한 인권지표 초안에 대한 지표의 적절한 위 관련한 질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셋째, 인권담당관과 협력하여 인권지표 초안에 대한 담당(관련)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 인권지표를 확정하였다. 인권지표 초안 중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총 83개 지표에 더해, 수원시 관련 지표(수원기본통계, 수원시 사회조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하여 총 136개의 인권지표를 생성하였다. 담당(관련)부서에게 인권지표명, 인권지표의 측정방법, 출처, 측정(생산)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총 80개의 수원시 인권지표를 선정하였다.

넷째,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13명에게 확정된 인권지표에 대한 IPA 분석을 진행하였다. IPA 분석은 전체 정책목표, 중점사업 및 각 중점사업에 따른 인권지표들에 대한 중요성과 적실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IPA 분석의 결과에 따라 수원시는 각 지표에 따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이후에도 관련 부서, 전문가, 시민과의 토론회, 설문조사 등 인권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지표를 보완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권지표의 활용방안과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시 인권지표의 기초 연구로, 이후 ‘수원형 인권지표’ 개발 시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수원형 인권지표는 ① 수원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현재의 지표에 더해 인권의 보편주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② 인권지표의 대표성과 측정산식을 고려해 실제로 수원시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원시 맞춤형 인권지표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또한 ③ 현재 정책목표와 중점사업을 기반으로 선정된 행정중심적인 지표의 특성을 보완하여 수원 시민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제2절 정책제언

1. 인권정책 실행과정 점검

수원시 인권지표는 인권정책 주무기관이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인권정책의 실행과정은 ① 계획수립 단계, ② 정책추진 단계, ③ 사후평가 단계로 구분되는데, 수원시 인권지표는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인권지표는 제1 과정(계획수립)에서 인권정책의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준점의 역할을 하며, 제2 과정(정책추진)에서는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세부사항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제3 과정(사후평가)에서 수원시 인권지표는 세부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단위가 될 수 있다.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인 인권담당관의 경우, 수원시 인권지표 계획 수립 단계와 정책을

추진하는 시행 단계, 그리고 사후평가 단계에서 인권정책의 계획수립의 명확성, 추진 방향의 정확성, 사후평가의 엄밀성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인권정책을 실행하는 인권담당관은 정책과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수원시 인권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5조 제2항의 세부항목에 따르면,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사항, 수원시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한다고 되어 있다(「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2020.06.10.). 수원형 인권지표의 연구 및 개발은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자문역할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2 •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2012년 유엔인권대표사무소는 「인권지표」를 발간한 본 취지에 대해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감시’(monitoring)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인권지표가 소극적인 평가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시의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인권도시 구축을 시정의 지상목표로 표방한 광주광역시 또한 인권지표가 인권행정을 위한 내부 점검용이나 인권위원회의 심사용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가 광주시의 인권정책과 인권행정을 감시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제시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에 실린 ‘인권증진 추진체계 구축’을 살펴보면 인권도시의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 인권도시 추진체계



자료: 광주광역시(2012)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에서 재인용

이 그림에서 광주광역시는 인권도시의 실천주체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시 행정부는 인권전담부서의 설치(인권담당관), 인권정책 개발, 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시민위원회는 인권정책 심의의결, 인권영향평가 심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인권실천 운동, 인권정책 모니터링,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정책 모니터링 활동은 시민위원회의 인권정책 심의의결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즉, 시민사회의 인권정책 모니터링은 점검용이나 평가용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감시용에 해당한다. 광주광역시는 「인권증진 추진기구」 체계도에서도 인권도시 거버넌스와 인권지원센터 사이에 ‘인권 NGO/인권시민디렉터’를 위치시키면서 시민사회의 업무가 ‘인권정책 및 행정감시’를 명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2). 이런 점에서 볼 때, 광주인권지표는 시정의 인권정책과 인권행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수원시 인권지표는 주무기관의 인권정책에 대한 자체 점검용이나 내부 심의용에 그치지 말고, 유엔인권지표의 본래 취지에 맞춰 수원특례시의 인권상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하고 비판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민사회적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수원시 인권지표의 활용도는 수원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시민 인권 단체들의 감시 활동 강화 정도에 달려 있다. 예컨대, 수원시인권교육단체네트워크는 수원시 인권담당관, 수원시 인권센터 등과 함께 매년 두 차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기관들과 민관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인권정책과 인권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적 모니터링까지 담당한다면, 수원시 인권지표에 기반한 인권교육정책을 비롯한 모든 4대 목표의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네트워크 활동까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또한 수원시 인권지표는 ‘시민 인권지기’ 활동의 행동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는 2020년 6월에 개정되었는데, 수원시민의 참여적 권리 행사를 위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는 ‘시민 인권지기’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비록 기본 조례에는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세부 항목이 없지만, 2019년도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시민 인권지기의 역할이 크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 ② 인권관련 개선사항 제안, ③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및 지원활동,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07.26.).

그런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와 달리 수원시에는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 인권지기는 단 한 명도 없다. 반대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7년 2월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시민인권실

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제12조). ‘시민인권실천단’은 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②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③ 제도 개선사항 제안,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20).

광주광역시의 시민인권실천단처럼 이후 수원시에서 시민 인권지기가 임명되어야 하며, 이들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동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권지표는 시민 인권지기의 인권 현장 감시 활동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 수원시민의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수원시는 인권 기본 조례에 인권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는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지원,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최근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수원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운영계획은 4대 목표와 4개의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4대 목표는 ① 적극적 인권행정 구현, ②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③ 인권 교육 내실화, ④ 인권문화 확산이며, 4개 핵심과제는 ① 공직자 인권 역량 향상 및 공공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② 수원형 시민 인권교육 플랫폼 ‘수원시민인권학교’ 운영, ③ 인권교육 허브 강화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④ 인권교육 시민 참여문화 및 홍보 강화이다(비전21뉴스, 2024.03.21. 보도자료).

수원시 인권지표는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권지표에 관한 인권교육이다. 이 인권교육에서는 국가인권지표 등과 수원시 인권지표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수원시 인권지표의 특성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인권지표를 통한 인권교육이다. 이 인권교육에서는 인권도시 수원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척도로서 수원시 인권지표의 역할과 기능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인권지표를 위한 인권교육이다. 이 인권교육에서는 수원시 인권지표의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식 교육 방식을 취해 인권지표의 가치와 의의를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4 • 인권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원시 인권지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권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인권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수원시가 인권증진을 위해 실행한 다양한 인권정책의 효과(또는 성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책의 성과 분석과 함께 보완점이 파악되기 때문에 대안적인 정책 제시나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권지표 기초자료를 집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인권지표 체계의 과학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원시의 인권증진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의 전체 과정의 과학화 과제를 앞당겨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는 데이터분석센터가 있다. 데이터분석센터는 ▲ 데이터분석센터 운영, ▲ 수원서베이 조사 수행(매년), ▲ 수원도시지표 개발·관리·분석, ▲ 패널조사 수행(분기별), ▲ 시정 주요 현안 요청에 따른 통계 조사 및 분석 수행, ▲ 연구원 과제 수행에 필요한 통계 조사 및 분석 대행, ▲ 데이터분석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본 연구는 인권지표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현재 개발한 수원시 인권지표는 생산 가능한 지표 위주로 살펴본 아쉬움이 있다. 이후 ‘수원형 인권지표’ 개발 시 수원서베이나 수원도시지표의 자료를 활용하면, 수원시 인권지표의 과학적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행한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 개발」(김태홍 외, 2013)이 제기한 ‘인권자료의 생산 및 관리 인프라 구축 방안’이 수원시에서 가장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REFERENCE

국문 자료 |

- 강현수. (2014). **인권 도시 만들기**. 그물코.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관계부처 합동.
- 광주광역시. (2012). **광주인권현장과 인권지표**.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2019). **내부자료**.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2020).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 구정우, 공석기, 박병진, 김대욱, 김연미, 박문경, 백은정. (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대, 이규환. (2015).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155-178.
- 김경자. (2019). **뷔페 레스토랑의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KANO 모델, IPA 분석, AHP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김근혜, 강성권. (2014).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419-440.
- 김재철, 김기근, 민현정, 김행희, 김미경, 이정은, 박해광, 이무용, 허창영. (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 김창기, 이태형, 정유진, 송예지. (2022). **중량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중량구청.
- 김태홍, 윤덕경, 김영택, 주재선, 배호중, 김기근. (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홍, 윤덕경, 김영택, 주재선, 배호중. (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김필두, 류영아. (2014).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노동. (2017). **대전광역시 인권지표 개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서대문구. (2022). **서대문구 인권지표**. 서대문구.
- 손병덕, 하계형, 김하나, 오혜정, 김민선, 최수정, 김다슬, 이혜나, 김범준. (2021). **제1기(2022~2026) 오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오산시.
- 손영숙, 안국찬. (2023). **지방정부 인권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5(4), 627-647.
- 수원시. (2022a). **202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수원시.
- 수원시. (2022b).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수원시.
- 수원시. (2023a). **2023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적**. 수원시.
- 수원시. (2023b). **내부자료**. 수원시.
- 수원시. (2023c).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수원시.
- 수원시. (2023d). **제62회 2022 수원기본통계**. 수원시.
- 이동영. (2020). **통합적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69), 71-110.
- 이영안, 한연주, 김진선, 백재환. (2015).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18)**. 수원시청.
- 이영안, 한연주, 김은경, 박범준. (2019).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2023)**.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 이혜연. (2024).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원시청.

이우균 외. (202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가지표의 한국 적용 및 공간분석 -SDGs 2·6·7·12·13·15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3), 1-24.

이혜진, 강채련. (2021). 함께 누리는 인권공동체 경남 실현을 위한 인권지표 설정 연구. 경남연구원.

임재호. (2014). IPA 기법 및 QFD 기법을 이용한 염색가공업 품질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전영록. (2016). 수정-IPA 기법과 관광지 이미지를 활용한 만족도 분석: 안동시 월영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총론, 28(2), 75-99.

정원호, 손승연, 이지영, 윤인수. (2016). 군 인권지표 개발 연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최동희. (2012). IPA를 활용한 리조트 선택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리조트 유형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5(35), 99-113.

최영출·이지혜. (2014).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행복도 증진 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401-423.

최훈호. (2019). IPA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영문 자료 |

Gupta, Dipak K, Jongman, Albert J, Alex P. (1994). **Creating a Composite Index for Assessing Country Performa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posal for a New Methodology**, Human Rights Quarterly, 16(1)

Hass, Michael. (1994). **Improving Human Rights**, London Praeger

Humana, C. (1985). **World Human Rights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Martilla, J. A.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Developing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Journal of marketing, 41(1), 77-80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99

OHCHR.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신문기사 / 웹사이트 / 통계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05.24.).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비전21뉴스. (2024.03.21.).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 만든다.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338246>

수원시. (2019.07.26.).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sgLmPp/86569>

수원시. (2020.06.10.).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https://www.elis.go.kr/alrpop/alrDtIsPop?alrNo=41110176000001&histNo=006>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2024.04.12.). https://www.suwon.re.kr/c/organization_chart

수원시청 홈페이지. (2024.04.12.). <https://www.suwon.go.kr/index.do>

연합뉴스. (2019.04.04.).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154400061>

유럽연합 홈페이지. (2024.03.27.). **Human Rights**. https://capacity4dev.europa.eu/resources/results-indicators /human-rights_en

OHCHR 홈페이지. (2024.03.27.). **SDG indicators under OHCHR's custodianship**. <https://www.ohchr.org/en/ instruments-and-mechanisms/human-rights-indicators/sdg-indicators-under-ohchrs-custodianship>

UNDP 서울정책센터 홈페이지. (2024.05.17.).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sustainable-development-goals>

| 부록 |

1. 수원시 인권지표 정의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지표 개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비율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 • 전체 택시 중 전용택시 비율(1·2급 등록장애인 수 대비 전용택시 수) 			
담당(관련)부서	대중교통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내부)문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교통안전도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교통안전률 위한 자동차 1만 대당 발생하는 전체 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 건수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담당(관련)부서	경찰청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본통계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지표 개념	수원시 전체 교통시설 중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실, 승강시설, 수유시설 등이 설치된 비율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기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담당(관련)부서	교통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의무 설치 인지율			
지표 개념	전체 수원시 주택 수 중 소방시설을 설치한 비율 및 수원시민 중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법령을 인지하고 있는 시민 비율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소화기 또는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 주택 소방시설 의무 설치 인지율 			
담당(관련)부서	안전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화재안전취약계층 해소율			
지표 개념	화재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담당(관련)부서	안전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내부)문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범죄발생 및 검거율			
지표 개념	수원시가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지키기는 발생 건수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범죄 발생 건수 			
담당(관련)부서	경찰청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지표 개념	가정폭력 피해자의 폭력과 학대 구제율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 • 가정폭력 신고 및 처벌 건수 			
담당(관련)부서	여성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성폭력 발생 및 구제 건수			
지표 개념	성폭력 피해자의 폭력과 학대 구제율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 • 성폭력 신고 및 처벌 건수 			
담당(관련)부서	여성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CCTV 설치 대수			
지표 개념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대수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 대수 			
담당(관련)부서	도시안전통합센터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내부)문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1.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전반적 도시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 개념	수원 시민들이 정주환경에 대해 느끼는 환경 체감도와 만족도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체감도 • 살고 있는 지역 만족도 			
담당(관련)부서	스마트도시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지표 개념	수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 확보 면적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담당(관련)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주거안전망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율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담당(관련)부서	도시재생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1회용품 사용량			
지표 개념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1회용품 점검 업소 수			
지표 측정방법	• 1회용품 점검 업소 수			
담당(관련)부서	청소자원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소음공해도			
지표 개념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공해 정도			
지표 측정방법	• 환경기준치 대비 소음공해 정도			
담당(관련)부서	환경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발생량과 배출량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쓰레기 배출량 			
담당(관련)부서	청소자원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권지표명	하천 및 호소 수질오염도			
지표 개념	깨끗한 하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표 측정방법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담당(관련)부서	수질하천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 공간 수			
지표 측정방법	• 인구 천 명당 문화 공간(공연시설, 전시실 등) 수			
담당(관련)부서	문화예술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도서관 이용환경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수			
지표 측정방법	• 인구 5천 명당 공공도서관 수			
담당(관련)부서	도서관사업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체육 활동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수			
지표 측정방법	• 1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담당(관련)부서	체육진흥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지표 개념	1년 동안 음악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 있는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 횟수			
지표 측정방법	• 1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별 참여 횟수			
담당(관련)부서	문화예술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표 개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공연 지원 횟수 및 문화예술 예산 비율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공연 지원 횟수 •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담당(관련)부서	문화예술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취약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지표 개념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중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지표 측정방법	• 취약계층 인구 중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담당(관련)부서	문화예술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문화누리카드 사이트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지표 개념	수원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담당(관련)부서	평생교육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동호회 활동 수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이 여가생활을 누리고,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동호회 수			
지표 측정방법	• 생활문화 동호회 수			
담당(관련)부서	문화예술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1.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중점사업	1-3.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인권지표명	여가활동 만족도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만족도 및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설문)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설문) 			
담당(관련)부서	문화예술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보건 의료시설 수			
지표 개념	수원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수 •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보건 의료인력 수			
지표 개념	수원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인력 수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1인당 의료인력 수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지표 개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수			
지표 측정방법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대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수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지표 개념	수원 시민중심의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수요 적극 대처를 위한 시민 만족도			
지표 측정방법	•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설문)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사회복지예산 비율			
지표 개념	수원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예산 비율			
지표 측정방법	•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담당(관련)부서	복지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지표 개념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재가시설 급여 수혜자 수			
지표 측정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대비 재가시설 급여 수혜자 수			
담당(관련)부서	어르신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지표 개념	노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치매선별검사율			
지표 측정방법	• 치매선별검사율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독거노인 비율			
지표 개념	수원시 노인 인구 수 중 독거노인에게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독거노인 수			
지표 측정방법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독거노인 수			
담당(관련)부서	어르신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소아 예방접종률			
지표 개념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예방접종률			
지표 측정방법	• 만12세 이하 어린이 수 대비 접종자 수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결식아동 비율			
지표 개념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결식아동 비율			
지표 측정방법	• 만0~18세 인구 중 결식아동 비율			
담당(관련)부서	아동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초·중·고, 대안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 수			
지표 개념	수원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공급식 혜택 수			
지표 측정방법	• 초·중·고·대안학교 공공급식 혜택 시민 수			
담당(관련)부서	생명산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지표 개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지표 측정방법	• 만0~18세 인구 대비 센터 이용자 수			
담당(관련)부서	아동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지표 개념	자유롭고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학업중단 학생 수			
지표 측정방법	• 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			
담당(관련)부서	교육청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건수			
지표 개념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급증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건수			
지표 측정방법	• 위기청소년 1인당 서비스 건수			
담당(관련)부서	청년청소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지표 개념	시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돌봄을 위해 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			
지표 측정방법	• 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			
담당(관련)부서	아동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지표 개념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시간제, 방과 후, 영아전담 등 특수보육 지정 수			
지표 측정방법	• 전체 보육시설 수 대비 특수보육 지정 수			
담당(관련)부서	아동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보육통계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장애인 복지시설 수			
지표 개념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수			
지표 측정방법	• 전체 등록 장애인 천 명당 복지시설 수			
담당(관련)부서	장애인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내부 생산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			
지표 개념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정원 수			
지표 측정방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 대비 직업재활시설 정원 수			
담당(관련)부서	장애인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내부 생산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지표 개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1인당 활동보조시간			
지표 측정방법	• 중증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시간			
담당(관련)부서	장애인돌봄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내부 생산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1주일 1회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			
지표 측정방법	•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이상 한 비율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지역사회건강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스트레스 인지도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스트레스 정도			
지표 측정방법	•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설문)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1.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자살 발생 수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건강서비스 증진과 예방적 관리를 위한 자살자 수			
지표 측정방법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담당(관련)부서	보건소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소득수준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소득수준 만족도 및 가구 월평균 소득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의 만족도 • 가구 월평균 소득 			
담당(관련)부서	스마트도시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소비생활			
지표 개념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 측정방법	• 소비생활 만족도			
담당(관련)부서	스마트도시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국민연금 납입액			
지표 개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하는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지표 측정방법	•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담당(관련)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고용률			
지표 개념	수원시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지표 측정방법	• 15세~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담당(관련)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본통계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 지역별고용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실업률			
지표 개념	수원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지표 측정방법	•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			
담당(관련)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본통계 • 지역별고용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절대적 빈곤율			
지표 개념	절대적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표 측정방법	• 전체 인구수 대비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수			
담당(관련)부서	복지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3년			
출처	•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고용안정성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지표 측정방법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담당(관련)부서	노동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지역별고용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사회적 일자리 수			
지표 개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 수			
지표 측정방법	•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 수			
담당(관련)부서	마을자치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수			
지표 개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수			
지표 측정방법	• 사회적 경제 조직 수			
담당(관련)부서	마을자치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직업훈련교육 지원			
지표 개념	수원 산업 시장 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수원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교육(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예산 및 프로그램 수와 만족도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교육 예산 및 프로그램 수 • 직업훈련교육 만족도(설문) 			
담당(관련)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자체(내부)문서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여성의 노동조건			
지표 개념	여성의 권리보장과 성평등을 실현하는 취업률, 비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남성과 비교) •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남성과 비교) • 여성의 평균임금(남성과 비교) 			
담당(관련)부서	노동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고용조사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			
지표 개념	수원시 여성의 고용률인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여성 인구 대비 여성 취업자 수 			
담당(관련)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2.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중점사업	2-2. 차별 없는 경제활동
인권지표명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지표 개념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비율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취업 여성 중 결혼,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비율 			
담당(관련)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명	공동체 의식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이 공동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공동체 의식			
지표 측정방법	• 공동체 의식			
담당(관련)부서	스마트도시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명	사회적 관계망			
지표 개념	수원 시민들 간의 연결, 상호작용, 교류인 사회적 지원			
지표 측정방법	• 사회적 지원(설문)			
담당(관련)부서	스마트도시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명	사회적 신뢰			
지표 개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원 시민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감			
지표 측정방법	• 일반인에 대한 신뢰감			
담당(관련)부서	스마트도시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사회조사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명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지표 개념	수원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 시민만족도			
지표 측정방법	• 공공기관(행정포함) 시민만족도			
담당(관련)부서	행정지원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명	행정정보 공개율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권익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지표 측정방법	•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담당(관련)부서	행정지원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명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지표 개념	수원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 및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성비율			
지표 측정방법	• 시 행정의 시민참여단 성비율			
담당(관련)부서	자치분권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명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의 행정위원회 참여율			
지표 개념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정위원회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 참여자 수			
지표 측정방법	• 행정위원회 참여자 수 대비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 참여자 수			
담당(관련)부서	자치분권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1.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지표명	시장의 리더십			
지표 개념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및 소통 빈도수			
지표 측정방법	•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및 소통 빈도수			
담당(관련)부서	자치분권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인권지표명	자원봉사 참여율			
지표 개념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지표 측정방법	• 전체 인구 수 중 자원봉사자 등록률			
담당(관련)부서	자치분권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기본통계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인권지표명	평균 자원봉사 횟수 및 시간			
지표 개념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인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지표 측정방법	• 1인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담당(관련)부서	자치분권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1365 자원봉사포털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인권지표명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지표 개념	수원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위원 비율			
지표 측정방법	• 전체 위원 수 대비 여성위원 비율			
담당(관련)부서	여성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자체(내부)문서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인권지표명	시 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			
지표 개념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행정위원회 여성 (부)위원장 비율			
지표 측정방법	• 행정위원회 여성 (부)위원장 비율			
담당(관련)부서	자치분권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3.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중점사업	3-2. 함께하는 사회참여
인권지표명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지표 개념	여성의 권리보장과 성평등 실현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수			
지표 측정방법	• 5급 이상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			
담당(관련)부서	인적자원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점사업	4-1. 인권정책 역량 강화
인권지표명	인권영향평가 건수			
지표 개념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식별하여 분석·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건수			
지표 측정방법	• 1년 동안 인권영향평가 건수			
담당(관련)부서	인권담당관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자체(내부)문서			

	정책목표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점사업	4-1. 인권정책 역량 강화
인권지표명	성별영향평가 건수			
지표 개념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성별영향평가 건수			
지표 측정방법	• 1년 동안 성별영향평가 건수			
담당(관련)부서	여성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정책목표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점사업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인권교육 참여율			
지표 개념	각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지식, 가치, 숙련도를 구축하기 위한 학습 과정인 인권교육 이수율			
지표 측정방법	• 공무원, 공공기관 법정교육 중 인권교육 이수율			
담당(관련)부서	인권담당관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점사업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성평등 교육 이수자 수			
지표 개념	성평등 공직문화조성 및 책무성 강화, 고위 공직자 성인지 역량 제고를 위해 5급 이상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수 대비 성인지 교육 이수자 수			
지표 측정방법	• 5급 이상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수 대비 성인지 교육 이수자 수			
담당(관련)부서	여성정책과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목표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점사업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인권 실태조사 건수			
지표 개념	수원 시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인권 실태조사 건수			
지표 측정방법	• 1년 동안 인권 실태조사 건수			
담당(관련)부서	인권담당관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 자체(내부)문서			

	정책목표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점사업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지표 개념	인권문화 실현 및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건수 및 예산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건수 •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 지원 예산 			
담당(관련)부서	인권담당관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내부)문서 			

	정책목표	4.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점사업	4-2.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인권지표명	국내 민·관 인권협약 체결 건수			
지표 개념	인권문화 실현 및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기관과의 인권협약 체결 건수			
지표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민·관 기관과의 인권협약 체결 건수 			
담당(관련)부서	인권담당관			
자료 제공주기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내부)문서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최고훈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SRI-정책-2024-02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dicators in Suwon City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4년 06월 15일

발행 2024년 06월 15일

ISBN 979-11-6819-171-6(93330)

© 2024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24. 「수원시 인권지표 개발 기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